

I. 이론적 배경

인간발달 생태학이란 환경적 상호연결성과 그 상호연결성이 심리학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다면 대인간 과정들(interpersonal process)-강화, 모델링, 동일시, 및 사회학습-에 대한 이론들이다.

대표적으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은 사회환경이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학습이론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환경은 발달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상황, 즉 개인이 반응하는 대상이나 그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초월한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그 장면setting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들간의 관계, 그 관계의 본질, 그리고 그 관계가 직접 그 개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하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영향들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환경 내에서의 상호 관계들의 복합체를 미시체계(microsystem)라고 부른다.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의 원리는 장면들내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면들간의 연결고리들에게도 똑같은 힘과 결과로써 적용된다고 본다. 발달하는 개인이 실제로 참여하는 장면은 물론 그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도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사람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가 중간체계(mesosystems), 후자가 외체계(exosystems)가 된다. 마지막으로 겹구조로 된 상호관련된 체계들의 복합체는 특정한 문화나 하위문화에 공통되는 사회적 제도의 이념과 조직 위를 덮고 있는 아치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일반화된 형태를 거시체계(macrosystem)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한 주어진 사회나 사회 집단내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구조와 본질이 마치 같은 모델에 의해 구성되 것처럼 유사한 경향이 있고, 그 체계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간에는 그 구성체계들이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 다른 인종, 종교집단이나 혹은 전체 사회들을 특징짓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더 큰 사회적 맥락이 인간발달을 위한 환경으로서 갖은 생태학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발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머니-아동 이원체계의 역량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 외부 사람들의 행동에도 의존되는 것을 보게 된다. 외부 사람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탁아기관 종사자처럼) 다른 장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고(중간체계), 또 어떤 사람들은(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 어머니와는 접촉이 있어도, 아동과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외체계). 그러한 외적 긴장과 지원의 존재와 본질은 좀 더 넓은 사회(거

시체계)에 있는 제도와 신념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혼가족 아동들의 삶을 의의있게 변화시키거나 이혼으로 인해 입은 심리적 발달의 손상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 이념적 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미시체계(microsystem)

미시체계는 빌달하는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학교, 야영장, 놀이터 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요인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건축자재인 셈이다.

아동의 심리적 성장은 아동이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촉진된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리고 나서는 가정 밖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아동 자신은 계속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고, 딸, 여동생, 손자, 조카, 친구, 학생 같은 팀의 동료 등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배울 때, 좀 더 복잡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킨다.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관찰적 이원체제, 공동활동 이원체제, 일차적 이원체제 등이 있다. 관찰적 이원체제(observational dyad)는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해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적어도 그 상대방이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형성된다.

공동활동 이원체제(joint activity dyad)는 두 명의 참여자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다소 다르면서, 일종의 통합된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아동, 혹은 친구사이는 그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지 등을 상상한다.

2. 중간체계(mesosystem)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루어진다. 예로서, 아동의 경우는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집단 사이의 관계들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이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연결 이외에도 상호연결성에는 많은 부가적인 형태의 상호연결고리(interconnections)들이 있다.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간다. 학교건물은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더 커지고, 더욱 비인격적이 된다. 교직원의 수는 증가하고 더 먼 지역으로부터 뽑혀오며, 때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살지 않고 멀리서 통근을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알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학교가 도시의 변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는 아동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려는 학교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리고 학교가 기여해야 할 지역사회, 이웃, 가족들의 생활로부터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수용소가 된다. 학교 자체내에서도 아동들은 해마다 바뀌는 교실로 인해 서로 차단되어지면서 반복적으로 고립화 된다. 게다가 교실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정체감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고, 적극적 공동체로서 교실간의 연결이나 학교와의 연결이 별로 없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의 상대적 부재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주로 또래끼리만 내던져지므로 연령별로 분리된 파괴적인 세력이 만들어져도 이를 견제할 수 없게 한다. 아동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권장되는 유일한 성인들은, 세상에 대한 경험은 다양하게 하지 못한 채 석사학위만을 갖은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학교는 과거 20년 이상 “미국 사회에서 집단을 만드는 가장 세력있는 양식장의 하나”가 되어 왔다(Bronfenbrenner, 1974). 과거 수십년간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 전반과 대학생들에게 기록된 성취도 검사점수의 하락(Harkshfeger & Wiley, 1975)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외때문이라고 본다. 이 점은 학령기 아동들의 살인, 자살, 약물복용과 범죄의 증가율에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Bronfenbrenner, 1975).

3. 외체계(exosystem)

외체계란 하나 이상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해 가는 개인이 그 환경들 속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환경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외체계의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손위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부모의 직장은 외체계 영역이다. 외체계는 아동발달에서의 가능성과 과정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치에서만 주변적이지, 힘에서는 주변적이지 않다.

직업상황에서 형성된 태도가 가정으로 연장되어, 부모로서의 가치관과 양육실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Kohn의 연구결과들은 작업환경이 아동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체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직업수준에 기초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버지 자신의 부모 행동보다 어머니의 부모행동을 더 잘 예언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TV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TV는 아동의 외체계 일부를 구성한다. 이 강력한 대중매체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므로, 2차적 효과의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이 경우, 그 효과는 완전하게 미시체계내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체계의 현상으로서 생태학적 경제들을 거쳐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TV화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TV가 이끌어 내는 행동뿐 아니라 TV가 방해하는 행동에 있다. 즉 아동은 대화, 게임, 가족모임과 토론 등의 행동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격도 형성되는데, TV는 이러한 행동들을 방해하고 있다(Bronfenbrenner, 1974).

4. 거시체계(macrosystem)

거시체계는 주어진 문화 또는 하위문화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내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그런 일관성에 기초가 되는 신념체계 또는 이념을 의미한다.

텔레비전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사건들을 아동들의 일상적 경험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표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현상학적 세계에 외적체계는 물론 거시체계까지 제공해 주게 된다.

II. 유해환경관련 신문기사 모음

1. 유해환경 전반

“정부내 청소년 관련기구 대폭 확대를”／총리실 국정좌담 지상중계
서울신문 96.03.08

“청소년정책 현실과 너무 괴리 커 답답” 7일 열린 이수성 국무총리의 취임 첫 국정좌담회 주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이었다.

「어린이가 잘 자라야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는 소신을 평소에 밝혀온 이총리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총리는 이날 좌담회에서 일일이 참석자의 의견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즉석에서 개선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좌담회를 이끌어갔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조영승 한국청소년개발원장과 차광선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윤진간행물윤리위 음란폭력물심의위원(연세대교수)등 관련전문가와 정준희 서울여중교사 등 교육관계자가 참석, 이총리와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책방향에 대한 도움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총리는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 참석자를 일일이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뒤 『정부의 청소년대책에 잘못된 부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기坦없이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치선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장은 먼저 『국민의 25%인 1천3백만명이 청소년임에도 과거보다 사회적 관심은 적어진 것 같다』면서 『문화체육부를 문화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고 『작은 정부』에 구애됨이 없이 청소년 관련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견의했다. 박성수 청소년 대화의 광장 원장(서울대교수)은 『청소년폭력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교사의 폭행과 부모의 폭행, 그리고 심한 언어폭력』이라면서 『어린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인격적인 성인문화를 발전, 정착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순 공연윤리위 비디오심의위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너무 바빠 영화·비디오를 볼 시간이 없다보니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불법비디오와 컴퓨터게임·인터넷을 보지 않고 TV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선정성·폭력성을 운운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정책담당자가 「현실감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외치기에 앞서 그동안 왜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여가활용방안만해도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수경 서울YWCA회원활동부장은 『최근 한 청소년잡지에 동성애사진을 8개나 이어놓은 광고가 실려 학부모의 항의가 거세다』면서 동네서점에서 유해잡지를 얼마든지 사볼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명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은 『청소년유해환경을 없애는 데는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으로 결국 시민의식이 살아나야 한다』고 꾀력했고, 이에 이총리는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형정 경찰청 방범지도과장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회정책이 우선이고 다음이 형사정책, 형벌은 최후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민간단체나 관계부처가 앞서고 경찰은 뒤따르는 정화정책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며 『그러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모두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나가자』며 다짐과 당부를 겸한 인사말로 좌담회를 마무리지었다.

폭력·음란성 인쇄물 등 생산·유통 균원적 차단/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일보 96.03.08

정부는 7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폭력·음란성이 강한 인쇄 및 영상물의 생산과 유통을 균원적으로 차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국정좌담회에서 조영승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폭력음란물 특별규제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배석한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음란·폭력물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토록 지시했다.

이총리는 『부처별로 음란·폭력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균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 중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또 참석자들의 건의내용중 문화체육부를 문화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락시설에 밀려나는 문화공간 (긴급연속 좌담 : ⑤사회환경 오염) 중앙일보 94.06.01

불량비디오·만화 원천규제 필요/비행 무조건 처벌은 재벌악순환/공부만 강요땐 누구나 쉽게 좌절/“소질 살리면 성공”

□참석자

▲엄종기 서초고교장

▲김기수 경찰청 차장

▲심영희 한양대 교수

▲김기수차장=사회라는 토양에 병균이 침입하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산물이 곧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와 사회환경의 불가분성을 설명하는 말이죠. 이 말은 특히 이성적인 판별력이 발달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선도에 앞서 사회에서 유해환경을 숙아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심영희 교수=이번 박한상군의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극빈 또는 결손가정이 아닌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란 청년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의 의식차이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모세대에서는 경제적 성공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지만 이미 유복하게 태어난 자식세대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열망을 갖는 대신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이들이 향락업소와 폭력·음란영화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면 쾌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범죄행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 엄종기 교장=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은 유흥업소나 폭력·음란영화만이 아닙니다.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대중매체의 역기능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보다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말을 더 신뢰합니다.

TV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범죄행위 묘사 등은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가르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지난번 변조지폐사건 보도 이후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TV프로그램의 엄선이 필요합니다.

▲ 김 차장=범죄는 결국 도덕적 자제심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심리적 자제력을 길러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향락적인 소비문화가 사회전체를 압도하다보니 판단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로서는 그것을 감내하기 어렵지요. 유흥을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하고 자칫하면 이는 크고 작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또 자제력이 부족하다보니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폭력을 유발하게 되지요. 청소년 범죄의 90% 이상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 심 교수=우리 사회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것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이 건강하지 못했던 탓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2차산업이 채 성숙되기도 전에 3차산업이 이상비대해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흥업소들이 주택이나 학교주변에 깊이 파고든 나라도 아주 드뭅니다. 유흥가와 주택가를 엄격히 분리하는 조닝 시스템 (zoning system)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엄 교장=선진 12개국의 국민총생산이나 생활수준·사회시설 등을 바탕으로 한 선진준거지수를 보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우리의 GNP는 57, 물가는 92, 자동차 보유대수는 40으로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시설은 4, 무대예술은 3, 박물관 수는 1에 불과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불건전한 환경은 존재하게 마련이지만 이같은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닙니까.

▲ 김 차장=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호기심만을 파고드는 불량만화나 잡지·비디오테이프 등이 범람, 청소년 심리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것에 탐닉하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사회 적응을 위한 직능교육에 머물고 있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엄청난 정보량을 주입시키다보니 그것을 따라가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뒤떨어져 끌리끼리 어울리며 비행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 매사가 사무적이 되고 정서를 교환할 기회가 없어 점점 더 폐마르고 따라서 공격적·파괴적이 되며 그 가운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심각한 인명 경시풍조가 배태됩니다.

▲ 심 교수=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과거에 그랬듯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정체성을 가지고 성취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가 다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성공해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 엄 교장=사회가 다양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3학생 6백명이 졸업하면 절반인 3백명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나머지 절반에게 인생을 제대로 설계해보기도 전에 좌절감부터 맛보게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자신이 낙오됐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가게 될 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 김 차장=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무조건 격리시키고 처벌하면 범죄와 단죄의 악순환만이 거듭될 뿐입니다. 비행청소년을 엄격히 선별해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사회적응훈련을 시킨뒤 사회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행청소년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뜻을 모으는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문화공간 달리고… 유해환경 관치고…／우리 청소년 놀 곳이 없다
중앙일보 94.06.05

록카페경험 70% 학교도／교내서들도 입시로 유명무실／수련시설·회관 특정지역 편중돼 이용못해

정모군(15·중3)은 지난 1일 친구 2명과 함께 이를동안 여관에서 잔뒤 돈이 떨어지자 빈 집에 들어가 2만여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모의 「공부하라」는 성화에 책상앞에 앉아 따분한 시간을 보내던 정군은 우연히 친구들과 어울려 예의도로 뛰쳐나가

배도타고 자전거도 타면서 모처럼 맛본 즐거움의 유혹에 빠져 이를간 가출했고 여기에 필요한 용돈을 마련하려다 결국 「절도범」이 되고 말았다.

『집하고 학교밖에 갈곳이 없어 따분하던 참에 친구들과 어울리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군의 고백은 요즘 갈곳도 놀곳도 없는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의 박상한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정이나 학교·사회가 그동안 청소년들을 실별한 임시경쟁터로 내몰기만 했을뿐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놀이공간이나 문화를 마련하는데 무관심했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노래방이나 당구장에 안가본 학생들은 한반에 두세명에 불과합니다. 어떤 학교에선 70% 정도가 록카페에 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이명화실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찾아보면 청소년을 위한 건조한 놀이·문화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서울 보라매 청소년회관은 5월 내내 주말마다 영화·영상감상회를 열었다. 뿐만아니라 문학·사진·미술·연극등 청소년들의 서클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무료 제공해 준다. 이런 종류의 청소년회관이 서울에만 11곳, 전국적으로 39곳이나 있다. 또 수련원·수련마을·야영장 등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모두 2백84곳이나 된다. 그러나 청소년 1인당 전용시설 보유면적은 0.02평방m로 일본의 35분의 1, 독일의 7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마저도 1백% 활용되지 못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직접 참여보다는 대부분 관람차원에 그쳐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지못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최종인사무관은 『홍보부족·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소년들도 입시부담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임시위주교육과 학교측의 외연도 놀이문화나 공간부족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한개 이상 특별활동을 하도록 돼있으나 시설부족에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형식적인 것치레교육에 그치고 있다. 서울 D교 권모교사 (학생지도주임) 는 『우리 학교의 경우 원드서핑부·국악부·테니스부·사진부·문예부·합창부 등 서클이 마련돼 있으나 그저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의 박경애박사(34)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명무실한 상태인 교내서클 활성화와 정부의 시설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공부만 앞세우는 교사·학부모들의 의식전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금지」 지켜져야 (사설)

서울신문 96.03.03

헌법재판소가 1일 노래방 청소년출입제한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원칙에 는 모두들 동의하지만 실제 사회현실에서 이 원칙은 전면적으로 묵살돼 왔고, 일부 유흥오락업소들은 오히려 청소년을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해온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현재 판정을 좀더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청소년보호의 준칙을 보다 실제화하는데 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의 흐름은 어느 때보다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관심사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미국에서 최근 범제화한 TV의 V칩장착 의무화이다. V칩은 부모가 자녀에게 시청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을 TV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이다 이 강제제도에 대한 방송업계 반응 또한 의외적이다. 미TV방송업계는 2월 29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오락프로그램에 시청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V칩제도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런 동향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껴야 한다. 미국은 그 나름대로 각종 청소년 출입금지제를 실시해 온 나라다. 청소년에게는 술집출입이 아니라 술판매마저 하지 않는다. 영화관만해도 성인영화관에 청소년출입은 철저히 금지된다. 우리 실정은 정반대다. 금지규정은 있으나 지켜지지도 단속되지도 않고, 심지어 10대 종업원을 일부러 채용하는 성인술집까지 있다. 노래방만 해도 현재 규정을 어기면서 주류를 팔고 있고 이 장소에 청소년을 받아야겠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을 내게 된 동기인 것이다.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자식을 가장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사회는 지금 청소년을 오직 사익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규정돼 있는 「청소년출입금지」는 어디서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심야영업 혜용 논란／ “규제완화 바람직” - “범죄증가” 맞서
중앙일보 95.09.16

◎지자체 지역설정 따라 결단할 듯 정부와 민자당의 「유홍업소 심야영업시간 제한 해제 권고」로 이문제가 또다시 찬반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의 조치는 물론 선언적의미에 불과하다.

영업제한권은 이미 지난 8월 민선 시·도지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규제완화라는 궁정적면이 있는 한편 사회풍속의 문란, 심야 범죄의

증가등 부작용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경우 각종 범죄발생이 늘어나면서 치안수요도 증가하는 등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 해운대·대전 유성·경북 경주등 전국 5곳의 관광지를 지난해 9월부터 관광특구로 지정한 후 범죄가 20%정도 늘어 치안대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또 경실련·YWC A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이에반해 대도시 유흥업주들은 영업권 보장과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 및 야간업소 사이의 형평을 내세워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시간 제한해제는 단순히 행정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해관계가 얹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될 것같지 않다. 영업시간 결정권을 갖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그 단적인 예다.

수입증대라는 측면에서는 해체가 긍정적이나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과 범죄 발생등 사회환경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날의 칼」을 가진 이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관광지인 수안보온천지역에 대해 지난 8월11일부터 오전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했고, 경남은 11월부터 부곡온천·해수욕장동 관광지에 대해 오전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윤락알선 등 1,735명 적발 중앙일보 95.12.26

성탄절을 맞아 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청소년을 상대로 한 퇴폐·변태영업 및 불량청소년 금품갈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1,735명을 적발했다고 25일밝혔다. 경찰은 이중 미성년자를 절대부로 고용, 손님들을상대로 나체쇼를시키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부산 사상구 감전동 P 주점 주인 김수현(24)씨등 13명을 식품위생법이나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종유흥업소 청소년 탈선 온상／젊음발산 공간 절실 국민일보 94.09.17

록카페·소주방 즉석미팅 등 「일탈」 잣아／YMCA, 청소년 문화실태 발표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5일 서울Y 종홍당에서 8월 8~19일 신촌 돈암동 압구정동 일대에서 조사한 신종유hood소의 청소년문화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록카페 소주방 노래방등으로 대변되는 신세대 유흥문화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자들에 따르면 롯카페등에서는 음주 흡연은 물론 즉석 미팅, 무절제한 성적충동에 따른 일탈행위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청소년들의 행위가 아무런제재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에 참여했던 박연혜양 (동구여상 1년)은 『내세울것 없는 청소년의 열악한 문화상황 때문에 어른들의 향락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탈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놀이공간의 떡없는 부족현상」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배출구」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학자들은 「어른들의 향락문화가 자연스레 청소년들에게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한명섭간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해서는 소영화 제작, 재미있는 축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학급문집제작등 청소년들의 자율활동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향락산업 변창 가치관 마비 (인간성을 되찾자 : 5)

동아일보 94.09.27

전국이 “홍청” … 비행·범죄심리 자극

『한국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길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도시전체가 마치 유홍가 같아요』 의류오피상 김창현씨(37)는 사업상 외국인들을 접대하면서 이런 낯뜨거운 소리들을 종종 듣는다. 지역적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는 유홍가에서만 「절제된 향락」을 즐기는 외국인들에겐 어디를 가나 「즐길곳」이 즐비한 한국이 별천지처럼 보인다는 것. 『룸살롱과 요정 안마시술소 카바레 러브호텔등 향락업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런 곳을 자주 출입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김춘식씨(23)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내가 한심해보여 일할 맛이 나질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순간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집어삼키는 우리 사회의 향락산업은 「공룡산업」이라는 별명과 함께 지난 20여년간 확대재생산을 거듭해왔다.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러브호텔 카바레 나이트클럽 사우나등 향락업소들은 연중무휴 손님들로 북적댄다. 한국유홍업중앙회에 따르면 호텔 안마시술소등을 제외한 룸살롱 스텐드바 나이트클럽등 술을 파는 유홍주점수만 전국적으로 1만6천여곳. 여기에 무허업소와 대중음식점허가로 사실상 유홍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포함하면 그 수는 5만~10만곳에 이를 것이라는게 중앙회측의 설명이다. 향락업소에서 쓰이는 비용은 업태와 업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개 1인당 10만~1백만원가량. 뇌물과 같은 「눈먼 돈」이나 투기으로 번돈 또는 향응제공을 위한 접대비등이 아니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서울강남 Y룸살롱마담 오모씨(32)는 『4명이 하룻저녁을 보낼 경우 2백만원 안팎의 돈이 든다. 월급 가지고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햇동안 이같은 향락업소에 흘러 들어가는 돈은 대략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향락산업의 변창은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사회자본은 물

론 수많은 젊은 인력들을 비생산적인 분야에 불들어 매는등 부작용을 빚는다. 향락산업은 나름대로 존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를 부추겨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노동가치관을 흔들며 인간성과 도덕성상실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많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왜곡 전도시켜 이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역기능을 수반한다. 권이중 한국교원대학교수는 「향락산업은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을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내면화시켜줌으로써 이들의 가치관 왜곡과 범죄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주변과 주택가까지 파고든 향락산업은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와 만화 전자오락등과 함께 젊은 범죄자를 만드는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것이다.

오렌지족 - 야타족도 “퇴폐 기형아”

이런 측면에서 대형승용차나 외제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한달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의 용돈을 써버리는 오렌지족 야타족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기형아」들이다. 또한 이들의 극단적인 사치 향락행각을 바라보며 한편으론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들을 흉내내는 소외계층 청소년들 또한 향락풍조의 희생자들이다. 백상창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은 「향락풍조는 부유층자녀들의 사치와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소외계층의 반발과 중요성을 유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소장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군이나 「가진 자들을 청소하려 했다」는 「지존파」의 범죄는 이같은 경향의 극단적인 예들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립서울대명예교수도 「인간의 내면속에 있는 범죄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향락풍조와 가진자들의 사치와 허영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50~60m 떨어진 곳에는 여관이 즐비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노래방에서는 미국의 여가수 마돈나가 침대위에서 남자와 야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장면이 나오고…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지난 15일 서울YWCA주최로 열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보고회에서 여고 1년생이 발표한 「청소년이 진단한 유홍문화」의 한부분이다. 향락적인 사회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시급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김찬국상지대총장은 「이제 소외계층이나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회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지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사회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양대 사회학과 심영희교수는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학교주변주택가와 유홍업소를 지역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닝시스템 (zoning system)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에 술판업소 “본때보인다”

중앙일보 1990. 1. 6

경찰은 첫날인 5일 전국적으로 1만5천명의 경찰력과 교사·공무원등 모두 1만7천5백명의 단속반을 투입,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합숙시킨 업소 1천백88곳을 적발, 업주 37명을 미성년자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님 끊긴 강남일대 디스코장들, 중고생 회원모집 새 탈선

한국일보 1991. 1. 13

이들 업소는 할인, 외상혜택을 주는 회원카드를 들려 중고생손님을 끌어모으고 10대손님들이 많이 들면 성인들의 입장까지 사절,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 중고생전용으로 알려진 디스코장은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강남역 일대의 7-8개 업소. 10여년전 처음 이 일대에 업소가 생겼을 때는 대학생들이 주로 드나들었으나 점차 연령이 낮아져 요즘은 주변 8학군지역의 고교생, 중학생들이 단골이 됐다.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은 하교시간인 하오5시-7시이며 주말과 중간, 기말, 모의고사등 각종 시험직후가 대목이다. 이들 업소는 더 많은 10대들을 끌기위해 학교주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압구정동 카페골목동지에서 회원카드를 나눠주고 있는데 소지자에게는 시간대에 따라 최고 20%까지 식음료대를 할인해주며 생일, 기념일에는 샴페인과 기념촬영 서비스를 하고 월 1회 정기초청동 갖가지 특전을 준다고 되어 있다. 또 단골에 계는 외상도 준다. 「반에서 30% 정도 가 카드를 갖고 있다」며 「기본이 2만원 정도여서 값이 싸고 또래끼리만 출입하니 부담이 없어 생일이나 시험후에는 꼭 가게된다」고 말했다. 각 업소는 「미성년자출입금지」포장을 입구에 내걸고도 직장인등 성인들의 출입을 막아 10대들끼리 모여 술, 담배를 즐기고 미팅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

노래방 청소년범죄 “새온상”

경향신문, 1992. 11. 1

당국의 시설허가기준 강화로 폐업일보 직전에 있던 90%이상의 노래방들이 지난 8월 31일 경찰청의 구제조치로 허가문제를 해결한 뒤 미성년자출입, 주류판매, 퇴폐영업등 불법영업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0일 밤 서울시내의 노래방 2천1백11개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탈법영업을 한 3백30개업소를 적발, 풍속영업규제에 대한 법률위반혐의로 업주들을 전원 형사입건했다. 탈법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출입이 75건, 주류판매가 56건, 시간외 영업이 15건 등으로 전체업소의 17%에 해당했다. 이같은 노래방의 탈법은 시설허가 완화방침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8월전에는 하루 10여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업주들이 시설허가를 받은 뒤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경찰청의 김상대 방범부장은 「근린생활시설 지역등에 위치해 문닫기 일보직전에 놓였던 노래방업소들이 경찰청의 방침으로 허가를 얻은 위부터는 공공연히 탈법을 일삼고 있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울의 경우 총2천1백11개업소중 신고필증을 받은 노래방은 6백28개이며 이중 90%이상이 경찰청의 방침에 따른 구제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래방 허가 심의위는 관할경찰서의 방범과장과 위원장으로 수사과장, 구청건설과장, 위생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세무서 부과가치세과장, 교육위원, 업주대표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내 비디오방 10곳중 7곳 퇴폐.탈선

중앙일보 96. 2. 7.

서울시내 비디오방 10개중 7개 업소가 밀실을 설치하는 등 퇴폐,탈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이사장 손봉호 서울대교수)가 최근 신촌·신림동 등 서울지역 1백8개 비디오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인 76개 업소가 밀실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의 75%인 82개 업소의 경우 비디오방 안에 놓는 의자나 침대를 설치했으며 절반이 넘는 59개(55%)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만들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를 한 업소는 31개(29%)에 불과했으며 비디오물을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분류한 곳도 41개(37.9%)에 그쳤다.

또 비디오방 출입문 크기가 정한 기준인 0.9m보다 좁은 업소가 41%인 44개 업소에 달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이에따라 건전한 비디오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성인전용 비디오방 설치, 개방형 시청실 설치, 심야영업 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령 제안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손이사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을 신종 러브호텔로 부르며 각종 퇴폐,탈선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정부는 비디오방에 대한 설립 및 시설기준을 위한 법령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비디오 감상실 이용 실태

중앙일보 96. 1. 24.

서울의 강남역 등 유총업소 밀집지역을 오가는 청소년 세명 중 두명이 비디오 감상실을 간 경험이 있으며 이중 절반이 성인용 비디오를 봤지만 감상실에서 성인용 비디오 대여를 거절당한 경우는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YMCA가 작년 7월~9월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지역 7곳에서 청소년 5백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감상실 입장 및 비디오 대여와 관련해 감상실 관계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이는 5.3%에 불과. 더욱이 청소년인줄 알면서도 업소관계자가 성인용 비디오를 빌려줬다는 응답도 70.6%나 돼 성인용 비디오 시청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22.4%가 비디오 감상실에서 주인이나 종업원이 술을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13.9%는 직접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청소년들은 대개 주말(85.2%), 오후 3~9시(68.3%) 사이에 학교친구(61.6%)와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성친구(26.5%)와 저녁 9시~자정 이후(15.8%)에 주로 이용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와관련, 정부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준수, 주류판매 및 반입금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형 룸 금지, 누워서 볼 수 있는 시설금지 등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운영 및 시설기준을 포함한 "전전화 대책"을 마련중이다.

유홍업소 출입하는 청소년 많다...고려대교수 발표

중앙일보 92. 7. 12.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방, 카페, 술집 등 유홍업소를 출입하고 있어 건전한 놀이마당의 제공 등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김문조교수(사회학)는 한국청소년학회 주최로 16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존재양식과 이용실태>를 발표, "청소년의 3분의 1 정도가 당구장이나 카페, 5분의 1 정도가 술집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히고 "비행청소년만이 아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같은 유해업소에 출입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구체적인 동기로

*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인접성

* 기성세대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적 내용의 전파

* 공부에 대한 압력을 비롯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긴장과 소외감을 지적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일탈욕구가 강해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5분의 2정도가 기물파괴 욕구, 4분의 1 정도가 강간 욕구, 3분의 1정도가 가출과 자살에 대한 유혹, 5분의 1 정도가 사창가출입 유혹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해시설이나 업소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주변 정화지역내에도 유홍업소가 벼젓이 영업을 하고 있을만큼 청소년 환경은 이같은 일탈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

이는 유해업소 출입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물어본 결과 '공부가 지겨워서'(20.3%)라는 응답 못지 않게 '단지 접근처에 있어서'(17.5%)라는 응답이 많은 테서도 확인된다.

김교수는 "사회적 통제의 약화와 유해업소 이외에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부족한 것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통제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해업소 단속에서 그치지 말고 민간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이에 개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긴장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청소년오락실 감소 추세...보사부 집계

중앙일보 92. 6. 12.

성인오락실과 청소년오락실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심야영업 규제등에 따라 전자유기장업소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사부가 12일 밝힌 '전자유기장업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의 전자유기장은 성인오락실 8백87개, 청소년오락실 1만4천72개 등 모두 1만4천9백59개로 지난해 말의 1만5천1백48개에 비해 1백89개(성인45개, 청소년1백44개)가 줄었다.

이들 전자유기장업소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89년과 90년도로 성인용이 각각 1천2백8개와 1천1백36개, 청소년용이 각각 1만4천3백44개와 1만4천8백32개였으나 작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성인 3백95개, 청소년 3천6백21개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성인 1백13개, 청소년 1천7백69개 *부산이 성인과 청소년을 합쳐 1천3백90개 *대구 1천1백3개 *경남 9백71개 *경북 8백85개로 집계됐다.

보사부 관계자는 "종전까지 유기장업법으로 규제해오던 전자오락실을 공중위생법상의 관리대상업종으로 지정해 불법유기장 단속 강화, 각종 오락기구 사전검사제실시, 심야영업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건전업소 유통으로 업소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같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자유기장업소가 불법제조 또는 수입 오락기구를 설치하는가 하면 행정법이 금하고 있는 시상금 제공등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업소에 대해 기계의 사전점검 여부와 사행성 도박여부를 가린 뒤 위반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청소년 탈선조장 노래방 11곳 무더기 입건

중앙일보 92. 3. 2.

서울경찰청은 2일 불법으로 음료수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영업한 관악구 신림5동 1451의 13 영심노래방(주인 박영춘)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11개소를 적발, 이중 6개소 주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등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소방법위반 혐의로 소방서에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등 유홍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이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등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지난달 9일부터 60개 업소를 대상

으로 단속에 나서 이날까지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중 영심노래방은 약 43평 규모의 홀안에 노래연습기 14대를 두고 영업하면서 당국에 신고없이 커피와 음료수자판기 각 1대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노래연습기 30대를 갖춘 대형업소인 강남구 신사동 662의 15 25시노래연습실(주인 오경숙)도 영업장 안에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소년전용 디스코장 운영

중앙일보 92년 1. 21.

서울지역 곳곳에 퇴폐유흥업소는 산재해 있지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부족하다. 청소년사업관과 서울YWCA, 한국결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 짜든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사업관=토요일 오후3시~오후5시 연중개장 용산구갈월동 (795) 8000

*서울YWCA=평상시 토요일 오후5시~오후8시 방학중 화,목, 토요일 오후4시~오후7시 (779) 7561.

*한국결스카우트연맹=토요일 오후2시~오후6시 서울안국동 결스카우트회관(773) 4347.

국교생 고스톱.포커 성행..점심시간등 이용,판돈 수천원씩

중앙일보 95년 3월 3일

국교생들 사이에 고스톱.포커등 성인들의 사행성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딱지치기.구슬치기.땅따먹기등 어린이들의 놀이는 사라지고 '어른들 놀이'가 동심을 명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북 수완보로 출업여행간 서울D국교는 6학년생들이 여관에서 판돈 수천~1만원 이상 하는 포커.고스톱을 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돈을 모두 빼앗아 돌아오는 날 돌려주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S국교 6학년 최모(13)군은 "우리반 41명 가운데 25명 정도가 블랙잭.원카드.하이로등 포커게임을 할줄 안다"며 "주로 부모님들이 모두 직장에 나가시는 친구집에 모여 게임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포커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고스톱과 포커를 해 지난 2학기부터 수시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A국교 5년 박모(12)군은 "딱지치기·구슬치기등 '시시한'놀이를 하는 애들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사행성 도박은 고소득층.중산층 아이들이 더 즐기고 학교주변 문방구등에선 포커와 화투를 벼젓이 팔고있는 실정이다. 일부 학생들은 1천~2천원짜리 어린이용 카드를 사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도둑질까지 한다.

서울YMCA청소년 상담실 유순(46.여)씨는 "경제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전자오락도박이나 고스톱.포커등을 하다 돈을 훔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단도박회 관계자는 "도박은 일단 시작하면 성격장애·도벽을 동반하는게 일반적이며 결국 사회에 적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도박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 학교폭력

학교:폭력」 제보즉시 경찰 출동／내무부

세계일보 96.05.14

전국 경찰서 - 파출소에 신고센터 설치／매월 첫 토요일 「폭력추방」 캠페인

전국 경찰서와 지 - 파출소에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설치되고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매월 전국에서 일제히 펼쳐진다. 또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 - 파출소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원협의회가 각각 구성돼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우석 내무장관은 13일 정부 제1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총리실과 교육부 관계자, 전국 시 - 도 행정부시장 - 부지사 - 부교육감, 각 지방경찰청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부차원의 「학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주요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현행 112범죄신고 체계처럼 앞으로 전국 경찰서와 지 - 파출소에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번호 미정)를 설치, 폭력피해 사례나 청소년 대상 불법 - 퇴폐영업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교외폭력단속반과 유해환경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만은 전국 시 - 군 - 구단위별로 행정 - 교육공무원은 물론 각급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단지나 유홍업소 밀집지역 등을 돌며 대대적인 가두 캠페인을 전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청 경찰서 지 - 파출소 단위로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돋기 위해 각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도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세부실천계획을 오는 20일까지 수립, 시행할 것을 시달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협」 발족／폭력서클 · 유해업소 집중 단속

서울신문 96.06.04

6백45개 중고에 「담당 경찰관제」 운영／통학로 주변 정 · 사복경관 배치

서울지방 경찰청(청장 황용하)은 3일 서울시와 시교육청 ·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를 공식 발족시키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의 집중단속과 학교폭력 근절활동에 들어갔다.

대책협의회는 본청 이외에 서울시내 30개 경찰서에도 각각 구성돼 교내 학생선도반과 교외 폭력단속반, 유해환경 단속반을 두고 교내 폭력서클, 학원과 독서실 주변 폭력, 환각

불질 흡입,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황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학교폭력이 기성 폭력조직과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시내 6백45개 종교교를 2천1백56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담당 경찰관제」를 운영,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량서를 해체와 비행학생 선도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자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등하교때 통학로와 학교주변 골목길 등에 경·사복 경찰관과 112순찰차를 배치, 선도와 단속활동을 평기으로 했다.

학교폭력／“언제 당할지 몰라 항상 불안” 29%

동아일보 96.06.17

전국 초중고생 천5백명 조사／“폭행 - 금품갈취 폐해본적 있다” 13%／대비책 “여럿이 등하교” 가장 많아 학교폭력이 즐거운 학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범죄행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교내폭력도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읊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말본색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교수와 교사 학부모로부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본다. 그리고 중고교생 스스로가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살펴본다.

구타 금품갈취 성폭행…

우리 청소년은 학교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을까. 또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얼마나 될까. 교육민회와 동아일보사가 여론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초중고생 1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3명이 학교 폭력에 불안을 느끼며 1명 이상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학교안, 또는 학교주변의 폭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29.1%나 됐다.

이같은 응답은 여학생(31%)이 남학생(27.3%)보다, 초등학생(36.6%)이 중학생(26.3%)과 고등학생(18.7%)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5대광역시 학생의 불안감이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30.6%) 서울(28.9%)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군지역(19.7%) 이었다. 실제로 「학교안팎에서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3.4%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남학생의 경우(19%)가 여학생(7.3%)보다 두 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5대광역시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각각 15.2%와 16.7%로 중소도시(11.8%)와 군지역(9%)보다 많았다.

이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체 학생의 30.5%가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비한다고 응답했는데 남학생(30.8%)과 여학생(30.2%)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등학교때 여럿이 함께 다닌다」는 학생이 39.5%로 가장 많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풀라서 다닌다」(20.5%) 「불량학생을 보면 피해 다닌다」(19.9%) 「어둡기 전에 다닌다」(10.9%)는 순이었다.

폭력학생에게 금품을 뺏길 것에 대비, 비상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극적인 학생도 2.4%나 됐으며 반대로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적극적인 학생은 0.9%였다. 흥미있는 점은 서울(37.6%) 5대광역시(48%) 중소도시(40.4%)에서는 모두 「등하교때 여럿이 함께 다닌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군지역에서는 「어둡기 전에 다닌다」는 응답(31%)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하이텔 대화방」 토론내용／동급생끼리의 괴롭힘 마음에 더 큰 상처／아무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도 잘못／“싸움 잘해야 남자답다”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민회는 지난 9일 오전11시~오후9시에 하이텔에 「학교폭력 이젠 그만」이라는 주제로 대화방을 열었다. 다음은 여기에 참여한 중고교생들의 대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기민=저는 학교폭력이 꼭 두들겨맞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 간에 행해지는 인격적 모욕도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우리반의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있죠.『그냥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겁니다. 말로 괴롭히고 팬히 때리기도 하구요.

△허원=최근에는 동급생 사이에서도 폭력이 심합니다. 피해학생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희준=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단 학생의 의식수준에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그런 폭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욱=학교폭력중엔 교사폭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도 안했는데 선생님에게 맞다보면 남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애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게 됩니다.

△고야성=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성격도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 당하지만 말고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임나은=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롭힌 아이들도 문제지만 당하고만 있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허원=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거의 다른 폭력학생과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보복을 당할까봐 반항하거나 말리기가 두렵습니다.

△김기민=학교폭력을 방지한다고 학교마다 담당검사를 배정하고 학부모를 배치한다고 해도 폭력학생이 『내가 폭력배요. 나 잡아가시오』 하겠어요. 학교폭력은 학교내부에서부터 처리해 나가야만 해요.

△김대곤=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하교시간에 경찰차 한대 세워놓는 게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경찰차안에서 경찰이 자고 있을 때도 많아요. 싸움을 잘하는 것이 남자답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희 학교는 싸움 안 말리다가 선생님께 걸리면 혼나요. 싸움나면 무조건 말리고 보죠.

△임나은=교육제도도 사실 공부잘하는 애들만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공부못하는 아이들

은 적응할 수 없게 돼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부터 의심하고. 저도 공부잘하는 아이들 위주의 학교생활에 짜증날 때가 많아요. 사실 공부를 잘 하거나 남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원근=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콘크리트 건물이 사람의 마음을 삭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학교에서는 건물을 목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합니다.

20여평되는 콘크리트 교실에 50여명이 생활합니다. 답답한 공간이 학생의 성격을 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일종의 화풀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사회 너무나 쉽게 폭력용서”／이옥분 서울S고 학부모

예전에는 학교 폭력하면 불량서클을 연상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큰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은 뒤부터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다. 지난 해 11월 고등학생이던 우리집 아이는 바로 앞자리의 급우가 자율학습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별을 서고 들어오다가 횃김에 휘두른 주먹에 맞아 코뼈와 눈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20일간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우리사회가 폭력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부분이 『자식키우다 보면 애들끼리 치고 받기도 하는 거지』라며 남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너무나 쉽게 용서해 줬다. 주먹을 휘둘러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때 청소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을 앞세워도 된다는, 정말로 위협하고 나쁜 습관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가정에선 내아이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는 것만 속상해 하지 말고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학교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벼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규율을 잡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힘있는 인물로 합리화하거나 우상화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눈 감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부모 - 교사부터 마음의 문 열어야”／정용민 서울천호중 교사 지난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겸거위주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흡연학생이 한두명일 때는 처벌이 효과적이지만 지금처럼 흡연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금연교육을 통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듯 학교폭력 역시 폭력학생을 격리수용하는 등의 대중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결국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젊고 유능한 상담교사를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상담실과 상담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있긴 하지만 이는 승진을 위한 방편일 뿐 실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교사는 거의 없다. 이달부

터 가동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같은 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학부모나 지역인사중 역량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을 만들고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며 학교폭력 피해신고소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당국도 평상시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연수나 부적응학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른들의 향락문화가 폭력 양산”／김준호 덕성여대 교수·사회학

불량학생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청소년끼리 싸움을 하는 것은 요즘들어 생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품을 갈취당한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폭력이 무서워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은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문화다. 힘을 우상화하는 사회에서 힘이 강한 학생은 힘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힘있는 어른이 만들어 놓은 퇴폐향락문화 역시 학교폭력을 양산한다.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 금품갈취인데 이는 유홍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청소년기 특징의 하나가 이 성에 대한 호기심과 어른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향락업소를 즐비하게 차려놓고 청소년들에게만 「청교도적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유해 환경으로 청소년을 몰아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이 땅의 청소년에게도 순수함과 꿈이 있다. 그러나 일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10대에 이미 낙오자가 된다. 여기서 소외된 청소년이 서로 모여 불량집단을 만들고 유홍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교육현실과 이 사회가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관심을 갖고 부산을 떠나 잠시 수그러들 뿐이다. 아니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보은 청소년 폭력서클 3개조직 공식해체식 (난류한류)

세계일보 95.11.26

보은지역내 중·고교생등이 가입한 불량서클 「TNT」 「백골」 「야성」 등 3개파 조직원 78명이 25일 보은읍내 군민회관에서 검찰과 경찰, 교육청관계자와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서클을 해체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을 결의.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큰 골칫거리였던 청소년 불량서클이 자진해산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여 기대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풍토를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학교폭력 범부처 종합대책／학교별 책임강화·유해환경 단속

한겨레신문 95.12.02

영상물 엄격심의·음주광고 제한

정부는 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 내무, 법무, 문체, 보건복지, 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교육부 △각급 학교에 폭력추방위원회와 폭력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선도 및 피해 상담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별 책임제 강화 △상습적인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제 적용 검토.
- 내무부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방범초소 증설 △유해환경업소 정화 및 단속 △내년 1월말까지 방학 전엔 학교주변, 방학중엔 유해환경집중 단속.
- 법무부 △학교담당 지도검사를 지정하고 지도검사의 책임 아래 교외 생활을 지도하고 학교주변을 정화 △소년선도위원회 우범학생을 1대 1로 맺어 개별상담 및 지도활동 실시
- 문화체육부 △영화, 비디오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물에 대한 민간단체 모니터활동 강화 유도 △우범지역순찰활동 강화 △정학 혹은 퇴학자 등 문제 학생들을 시도 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해 선도
- 보건복지부 △마약류 폐해 등에 관한 순회교육 실시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교육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 점검 강화 △전자오락실에서의 폭력, 음란프로그램 사용 단속 △청소년 출입 유홍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음주광고 제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성·비음성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적발시 즉각 삭제도록 조치 △불건전정보 접속방지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해외 불건전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국내유입 차단.
- 공보처 △신문·방송사에 학생폭력 추방캠페인 협조 의뢰 △방송프로그램, 잡지 내용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4. 학교주변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5천5백곳／95년까지 폐쇄·이전／교육부 정비계 국민일보 93.05.08

학교 주변의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유홍점객업소등 유해업소는 95년 말까지 자진 폐쇄하거나 학교에서 2백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또는 폐쇄대상 업소는 전자오락실 3천2백3개소, 만화가게 1천2백12개소, 여관과 여인숙 3백23개소, 당구장 86개소, 유홍음식점 55개소 등 모두 5천5백86개소이다.

교육부는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 교육청 시·군·구청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전자오락실의 도박행위, 만화가게의 음란물취급, 성인오락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학교주변 50m내에 담배가게 즐비／중고생 무분별 흡연 부채질 서울신문 93.05.19

담배자판기와 담배소매점등의 청소년 유해 환경 시설이 학교주변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 학생들이 원할경우 언제든지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단속이 요청된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 4월 서울시내 40개 지역의 50개 남자 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주변 및 청소년시설·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절대 정화구역에 담배자판기가 있는곳이 5%(5곳), 담배소매점이 있는곳은 68%(34곳)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학교앞 문방구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곳이 56%(28곳)나 됐고 토くん 판매업소 등에서도 완전포장이 아닌 낱개비로 50원씩 파는 무분별한 유통과정으로 아무에게나 담배를 판매,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채질 하는것으로 드러났다.

“비디오방 폐쇄방침”에 업주들 큰 반발 세계일보 93.11.22.

당국, 대학가주변 확산되자 “유해환경” 일방규정/ “전전문화공간 정착단계… 규제일변도 행정권 남용” / “출입연령·영업시간 등 제도적장치 마련하면 문제없어”

초미니극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디오감상실(비디오방)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당국이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쇄방침을 결정해 업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업주들은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맞서 최근 전국영상비디오감상실협회 (회장 유희창·40)를 발족하고 『비디오방 고객은 99%가 대학생이고 외설비디오 등 심의미불된 비디오는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비디오테이프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등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에 대해 일괄규제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디오방이란 노래방처럼 1평 정도의 칸막이방에 2~3명이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아이다이어 영상사업장으로 업소당 15~20여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백~5백개로 이중 90%이상이 대학가에 밀집해 있다. 비디오감상실협회측은 「비디오방에 관한 실질적인 행정지침은 총리실 산하의 사회기강화립대책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비디오방 일괄규제후 발생이 일자 「한번 폐쇄키로 한 결정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느냐」며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부는 지난 7월 「비디오방 영업활동 규제」 공문을 통해 『비디오방의 영업행위는 저작권법 공연법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건전한 대중문화와 청소년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행정처분 등록취소 등을 통해 강력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음란 퇴폐등 대중문화오염의 구체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퇴폐로 호를 가능성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규제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현재 성업중인 노래방이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되리라는 당초의 우려를 씻고 건전한 유흥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당국의 규제일변도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은 『비디오방은 산업발전과 의식 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형태인 만큼 건전한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영업시간제한 시설규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지금처럼 근거도 없이 규제만 하려드는 행정태도는 대중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0만원이면 20배 상금” 유혹

조선일보 1990. 4. 23

국민학교학생등 어린이들의 코묻은 돈을 노리는 돈따먹기등 수많은 도박성 불법오락기들이 서울의 국민학교 앞 문구점등에 널리 설치돼 성업중이다.

이 오락기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10만원짜리 카메라까지 상품으로 내걸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러한 오락기들은 대부분 일체를 모방하거나 이름만 바꿔 서울 세운상가등지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대당 하루 수입금이 많은 경우 5천원을 넘기도 하지만 이중 20%를 관리비조로 받고 나머지는 그사람이 가져간다』

교문 나서면 술집-오락실 “터널”

조선일보 1990. 10. 22

서울시교위가 지난 8월 서울시내 모든 학교(대학포함)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학교 경계선 2백m이내의 「환경위생정화구역」 6천5백59개업소 가운데 17%인 1천1백7곳이 교육유해업소였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음식점이 2백 25곳.....전자오락실이 2백24곳 학생들에게 해로운 출 알면서도 허가를 받은 전자오락실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규제대상을 좀더 명확히 정하고 규제폭도 훨씬 확대해야하며, 이전 및 폐쇄대상업소에 대한 보상규정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학교측의 고발이나 정비요청에 대한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성의있는 조치도 아쉬운 실정이다.

병들어 가는 어린이들
조선일보 1990. 10. 24

<학교주변의 난장판>

어린이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전자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고 성인만화를 보는 것이 나쁘다면 이렇게까지 벅젓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엄한 당국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정말로 어른들이 걱정하고 있다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까까머리로 들어가서 잠시 놀 수 있도록 그토록이나 여관이며 술집들이 학교주변에까지 파고들어오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성인영화를 봤다는 어린이들의 절반이상이 집에서 부모가 미처 챙기지 못한 비디오 영화로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어린이 주변에는 거리에서나 집안에서나 그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그들의 탈선을 부채질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여자의 광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짧은 무아지경의 붉은 밤 이야기」 이런 선정적인 영화 선전문과 함께 요사스런 반라의 여자 사진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어린이가 놓칠리가 없다.

<도덕적 판단력 저하>

---지금 우리들의 어린 학생들은 열이면 열 모두가 악의 온상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잡초뽑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어제도 서울시는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분노를 살 뿐이다. 지난 두어해동안 우리는 몇번이나 「집중단속」, 「강제철거」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오히려 퇴폐영업소는 늘어만 갔다. 손이 모자라서라지만 그래서만은 아니다. 마땅한 단속법규가 없어서라지만 그래서는 더욱 아니다. 그저 지속적인 단속의 의지가 없어서일 뿐이다.

어린이 자살 어른들에 책임
민주일보, 1990. 12. 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회장 김영만)

▲ 학교분건법의 체제를 강화하여 유해 환경과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신종 유해 업소인 학교 주변의 오락실 만화가게 문방구 등의 변태 영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단행할 것 ▲ 불법 선전 광고물의 단속을 맡을 각 교육구청의 보건계 인원을 현재 1명에서 대폭 증원,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 학교 주변 환경뿐 아니라 학교내의 생활 환경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나 선배들로부터 당하는 억압과 폭력으로 학생들은 극도로 증오심에 사로잡혀,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학교 안에서부터 밝고 명랑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서지부 회원인 권병자씨는 공항 근처 8국교앞 문방구에 설치된, 50~1백원을 넣고 하는

뽑기가 최고 8천~1만원짜리 상품을 내걸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 학교와 문방구에 건의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자 경찰에 진정해 결국은 그 기계를 치우도록 했다며 부모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옆 술집 오락실 만화가게 청소년탈선 유혹한다

동아일보 1991. 1. 18.

지난 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법령제정전 설치된 업소들에 대해 당초 금년 8월 31일까지 폐쇄 이전하도록 했던 행정당국의 방침이 올해초 95년말까지 연기된데서 알수 있듯이 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학교환경파괴의 원인중 하나는 당국의 무분별한 유해업소 허가행위. 서울시는 금년초까지 만해도 관할 교육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주변 업소 허가를 내주도록 했으나 민원처리의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업소인허가 심의 권한을 해당구청에 일임해 유해업소들이 학교주변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해시설을 설치, 학교보건법을 위반했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내리도록 돼 있는 것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성업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학교주변 유해환경

학교주변 대중공연장 논란/서울 정동아트홀, 6월 개관예정 허가신청
중앙일보 96.04.19

예원학교 등 4개교 “유해시설” 집단 진정

학교 밀집지역에 대중음악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 중구 정동 예원학교·창덕여중·이화여고·이화여자외국어고등 4개 학교 교사·학부모들은 18일 학교 인근 정동아트홀 개관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문화체육부·서울시교육청·중구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공연·출판전문회사인 (주)중원미디어가 서울 중구 정동 15의 옛 유네스코회관을 개·보수해 6월말 개관 할 예정인 정동아트홀은 1백80평에 6백석 규모로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여는 본격적인 대중음악전문 공연장이다. 이달초부터 내부공사가 진행중인 이 공연장은 예원학교 뒷담장과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고 다른 세 학교의 교문에서도 불과80~9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에따라 이들 4개 학교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경

계선으로부터 2백이내) 에는 국장·소국장 등 유해환경업소가 들어 설 수 없게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연장이 들어설 경우 청소년들이 대거 몰려들게 돼 학교주변이 우범지대화 되거나 학생지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특히 야간에 학교시설관리가 어려워진다는게 학교들의 주장이다. 중원미디어측은 지난달 26일 소국장 허가신청을 했다가 이를 취하하고 대중공연장으로 허가신청을 변경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강제 이전”／국회사무처 제안 국민일보 96.06.11

◎ 학원폭력 온상 제거대책／「청소년상담원」 조속히 설립／「약간통금」 자자체별 실시 규정 마련／“학교폭력근절”

시민대회 - 바살협국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들을 토지수용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제이전토록 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11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적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유해업소의 영업이 규제되는 학교주변 2백m이내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 전국적으로 3월 현재 1천 4백65개에 달하는 유해업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유해업소가 교육환경을 해치고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며 토지수용절차에 준하는 법적 규정을 신설, 이에 따른 보상과 강제이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청소년 약간통행금지제도와 관련,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이를 확대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는 또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대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해 단속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출연금을 확보해 청소년상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3천 6백여명 참석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회장 김성대) 회원 3천여명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앞에서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학생들이 건전하고 명랑한 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주변 폭력을 근절하고 유해시설의 정화, 퇴폐영업 추방에 시민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학부모들과 경찰 학교자치단체등 유관기관이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청소년을 선도하고 유해환경을 정비하는데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여의도광장에서 영등포 으로부터까지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안전·쾌적한 「배움터」 만들어주자／학교주변환경 (초등교육을 살리자 : 1 3) 한국일보 94.01.21

◎도로·철도 인접교 방음벽설치 급선투／동심 해치는 유해업소 빨리 추방해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국교 앞에는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 철로에는 하루 5백회가 넘게 열차가 다녀 소음 때문에 수업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매일같이 되풀이된다. 다만 그 정도라면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있을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철로 맞은 편인 학교 뒤쪽에는 문래고가도로가가설돼 있어 소음을 가중시킨다. 이들 철로와 문래고가도로만으로도 영등포국교는 소음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셈인데 철로를 넘어 문래고가도로 밑으로 난 또 하나의 고가도로는 아예 학교운동장 위를 지나고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을 학교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 된다.

○소음·매연에 고통

『뜨거운 여름철에도 제대로 창문을 열지 못할 만큼 소음이 심합니다. 목소리 작은 선생님들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또 인근 연탄공장에서는 탄가루까지 날아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책상을 청소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도로시커먼 먼지가 내려 앓곤합니다.』 영등포국교 암근선교장(59)의 말이다.

안교장에 의하면 고가도로와 철로로 인한 학교주변 소음은 학교나 주거지역의 낮동안 허용한계치인 50dB를 훨씬 넘어 쾌적한 수업환경이 심하게 저해되는 65dB수준이다. 84년 설치 당시 학교운동장위로 지나간다고 말썽이 됐던 도림고가도로는 그래도 방음벽덕분에 소음이 조금 덜하지만 문래고가도로는 방음벽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 놓아 손을 써 볼 도리가 없다고 한다.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에다 연탄공장서 날아드는 탄가루가 섞인 공기를 마시며 수업을 하는 영등포국교 교사와 학생들은 만성적인 기침과 잦은 갑기에 시달리고 있다. 코를 풀면 탄가루가 그대로 물어 나오고 시커면 가래도 자꾸 차오르는 경험은 이곳에 처음온 교사들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한다. 서울 서대문쪽으로 운동장과 맞붙어 철로가 있고 앞쪽으로는 광화문에서 마포쪽으로 향하는 대로와 2차선 너비의 이면도로가 엇갈려 깔려 있다.

학교 뒤편의 본관건물에서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숙교사(35·여)는 『소음 때문에 그런지 이곳 아이들은 교실에서 목소리가 유난히 커요. 둘이서만 하는 이야기도 악을 쓰듯이 말을 하는거죠. 제가 처음 와서 소음에 적응을 못했듯이 전학온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의 말소리에 먼저 놀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도로에 인접한 학교 앞쪽 건물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학교벽과 너무 인접해 있어 일조문제등으로 방음벽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뒤쪽철로가의 방음벽설치는 철도청 소관이라고 해 철도청에 건의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몇년째 듣고 있다. 준특수학교로 지정돼 항상 인근공장의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신도림국교나 학교인근 쓰레기 적황장의 악취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꼭 닫고 수업하는 서울이대부속국교도 주변환경으로 인해 수업은 물론 어린이·교사들의 건강마저 위협받는 경우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에 의하면 전국 6천57개 국교중 1백84개교가 소음환경기준치를 초과했고 이중 서울의 국교는 4백92개교중 39개교가 기준치를 넘어 전국평균의 2.4배나 됐다. 공해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 큰 위협요소가 되는 또 한가지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나 시설물들이다. 고려대 김문조교수(45·사회학)가 국교생 3백85명과 중·고교생 등 3천14명을 대상으로 92년에 조사, 발표한 「청소년 유해시설 및 장소의 실태와 개선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당구장·술집·전자오락실을 비롯한 모든 유해업소의 출입이 비행충동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제도적 부적응을 일으켜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경우보다 업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실이 청소년비행중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해 저지르는 「지위비행」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해업소가 인의 부정적 행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이처럼 아이들의 비행충동이나 범죄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클 데도 학교주변 정화구역의 정화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3년 5월 현재 전국의 학교보건법상 규제대상 유해업소는 4천9백56군데로 92년의 4천9백87군데에 비해 31군데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같은 감소는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결과 적발된 1만5천6백23건과 비교하면 0.2%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도 92년 3천5백43군데로 파악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93년에는 2백15군데 줄어 3천3백28곳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감시 확대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유해환경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해당 학교교사들과 교육청 관련자들이 행정단속이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고 경찰서나 구청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12년째 교단에 서고 있는 김모교사(34)도 「한달에 한 번 있는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행사는 유해업소 업주들과 대화하거나 계도하는 기회가 아니라 학교주변 쓰레기줍기로 그치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여러 학교주변 유해환경들은 대개가 교육적인 의미에서 「나쁘다」는 범주에 머무르는 정도이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유해환경도 많다. 도로나 철로를 끼고 있는 학교주변에는 순간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평생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92년 한해동안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1백93명, 부상자는 4만5천1백38명이었다. 각각전체 사고피해자의 10.3%와 14%정도 이지만 이를 사고의 80% 정도가 학교주변 반경 1km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어린이사고의 70~80%가 어른들의 무단횡단을 모방하거나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허억사고예방실장(34)은 『정부관계부처가 현재 추진중인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과 함께 국민모두가 주거지역과 학교인근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 교육개발원 김홍주연구원 지적／「국교정화구역」 철저 감독해야／처벌규정 강화… 위반시설 강제철거도

현행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설의 범위가 너무 좁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지행위·시설기준에 대한 조항이 모호해 유해시설을 허용할 개연성이 크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정도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연구부 김홍주선임연구원(39)은 최근 작성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그동안 학교보건법이 금지행위와 시설을 완화하는 향으로 개정돼 왔으며 각종 기준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의 폴격은 67년의 법제정 당시 문교부령이었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

81년 2차 개정을 통해 가축시장·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의 4 가지 기준이 추가되고 91년 시행령 5차개정 때 만화가게·전자유기장·터키탕이, 93년 노래연습장·담배자판기 등 4 가지가 추가됐을 뿐 사회상황 변화에 따라 충분히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 다른 기준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정화구역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약화돼왔다. 이 법의 시행령은 제정 당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시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3백까지(그외는 2백)로 규정했으나 81년 3차개정 때 절대·상대개념을 도입,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모두 규제했지만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백)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이전·폐쇄·유예기한이 법개정과 함께 자주 연장된 점도 정화구역관리를 약화시켜온 요인이다. 기준완화는 화구역내금지시설 운영자들이 학교보건법에 저항한 결과이기도 하며 정화구역관리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보고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금지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에 「인정」에 대한 구체적기준이 없어 판단을 모호하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6조 3 항의 강제규정도 필요한 조치와 그 경우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임의로 결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학교보건법 위반자를 1년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벌칙조항도 81년 3차개정 때 도입된 뒤 13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 경찰청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안／횡단보도 신호등 주기 아동 보폭에 맞게 조정／동하교 교통통제 교장과 협의결정

지난해 10월 행정쇄신위원회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국교주변 5백를 안전구역(SCHOOL ZONE)으로 설정키로 합에 따라 관계부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 안전대

책 수립과 어린이들에 맞는 교통시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과 구역내 시설 정비 등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우선 학교주변에서 일률적으로 교통규제를 하기보다 각 학교장과의 협의하에 유동성 있게 보호구역을 설정해 등·하교길 동선을 따라 교통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어른의 보폭 1를 기준으로 편성된 신호등 녹색신호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등·하교길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72년부터 국교·유치원 인근 5백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속도제한 (시속 20이하), 부분교통통제, 가도레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등 교통안전규정과 시설을 강화한 결과 70년 2천94명이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91년에는 4백81명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도 국교 반경 5백~1천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구역내 차량주행속도를 시속 20마일이하로 제한하고 노면에 장애물을 설치, 인위적으로 자동차속도를 조절하며 부분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교부근 5백~1천 범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시속 20이하로 달렸다는 사실과 안전운전에 상당한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보다 2배이상 가중처벌하는 교통법규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중·고교 서점가 저질광고 봇물／학교주변 성인잡지 ‘중독’

한겨레신문 94.02.28

◎선정적 사진·문구로 유혹… 성범죄 부추겨／당국, 단속법규없어 업주들 자체 종용그쳐 ‘신혼 성생활 가이드’ ‘섹스 테크닉’. 서울 서초구 □고교 앞 한 서점. 낮뜨거운 선정적 문구의 성인용잡지 광고가 학생들의 눈길을 잡아 끈다. 상반신을 거의 드러낸 여자 모델 사진이 서점 출입문에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고 전열장에는 누드 사진집도 버젓이 전시돼 있다. 이런 성인용 잡지 광고물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여고, □고, 서초구 □고, 마포구 □여고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중·고교 부근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참고서나 문구류를 판매하는 학교앞 서점의 주고객이 학생들인 점을 생각하면 이런 잡지 광고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실제 이런 광고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구매로 그대로 연결된다.

서초구 □고 양아무개(17)군은 “서점에 붙은 광고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성인용 잡지를 한 번 사본 뒤부터는 아예 친구들과 돈을 모아 매달 사서 돌려본다”고 말했다. 반별거 숭이 여성들의 사진과 야릇한 이야기들로 꾸며진 이런 성인잡지들은 한창 성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서울 □고 정아무개(16)군은 “참고서를 사려고 서점에 들렸다가 성인용 잡지가 눈에 띄기에 사서 숨겨놓고 몰래 보았는데 나중에 서야 이 잡지가 이미 학급 친구들에게는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런 성인용 잡지는 현재 10여 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여자 누드가 대담하고 내용

도 ‘진한」 흥, 口, ○, 등의 잡지가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서울 서초구 그리고 앞의 한 서점 주인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잡지의 경우 갖다 놓기가 무섭게 팔려 나간다”며 “광고물을 붙여 놓을 경우 판매량이 부쩍 느는 게 사실”이라고 ‘광고효과’를 귀띔했다. 그는 또 “어떤 학생들은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잡지를 점찍은 뒤 학원가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정적 잡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학교앞이나 주변 서점에서도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 관련 법규로는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이 있다. 이 법규는 학교주변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 극장, 만화가게, 여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 서점들의 선정적 잡지 판매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다. 저질 성인잡지의 판매가 끼칠 나쁜 영향에 대한 교육당국의 인식도 별로 높지 않다. 각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된 업소의 단속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성인잡지 판매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교육청 학교보건계 최인수씨는 “학교주변 서점들의 선정잡지 판매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단속법규가 없어 업주 스스로 의 자제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구청쪽도 마찬가지다. 각 구청은 올해초 대통령이 발표한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돼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방침에 따라 일제단속을 꾀고 있으나 성인잡지 판매 단속지침이 없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빼어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철거를 권유하는 게 고작이다. 참교육실천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정진(48·여) 씨는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부추기는 저질 선정잡지가 학교주변 서점들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단속법규 제정과 함께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저질잡지를 쫓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서점의 양식 (사설)

조선일보 94.03.14

서점이 책을 파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서점이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와 오락을 공급하는 지역사회와 중요한 문화적 기능이란 점도 대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서점들은 영리성이나 경영적 요구로 해서 그런 본래적 기능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책을 찾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데다가 대형 서점들이 늘어가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세 변두리 서점에 품위나 문화적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은 원래 그려해야 한다는 이상과 당위만은 역시 중요하다고 믿는다. 때문에 요즘 일부 서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서점의 책임아래 자체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학교주변 서점이 선정성 짙은 성인용 잡지나 사진집을 취급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에 해를 끼치는 점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고교생이 주 고객인 학교 주변 서점에서까지

비닐 커버를 한 누드 사진집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그 책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큰 관심거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교육이 어렵게 될 것은 너무 분명하다.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단속하려고 마련한 학교보건법이나 그 시행령이 무용지물이 될 뿐에 없다. 이 법은 학교 주변에 서 극장, 만화가게, 여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서점의 선정인쇄물 단속규정은 없다. 법의 미비가 반드시 보완되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서점이 스스로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출판물의 취급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이 서점을 가득 채우는 일이다. 서점이 잘 팔리는 책을 중심으로 서가를 채우는 것은 영리면에선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별로 잘 팔리지는 않지만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서가를 얻지 못하고 반품되는 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학습참고서나 흥미위주의 베스트셀러들을 서점이 고의로 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출판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적출판물이나 외설서에 못잖게 미신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책들을 서점의 중심에 크게 진열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또 집단간의 이익이 엇갈리는 분야에서 서가의 배분을 형평에 맡기 배치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특정종교서가를 다른 종교서가의 10여배 이상 크게 하여 공연한 오해를 빚는 일도 없어야 한다. 서점이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누가 달하겠는가만 그 사회문화적 기능도 도외시 말았으면 한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6천2백곳／교육부·경찰 합동단속
서울신문 93.05.08

◎작년이후 31곳 늘어

전국 초중고교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화작업이 시급하다. 교육부가 지난 90년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유해업소가 줄어들지 않아 정화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퇴폐·변태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모두 6천 2백16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보건법의 규제 대상 유해업소는 4천 9백56개로 지난해의 4천 9백 8 7개보다 불과 3 1개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같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감소는 유해업소에대한 합동지도 단속결과 적발된 1만 5천 6백23건의 0.2%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날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의 변태영업행위등을 강력 단속,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시에서 ▲성인오락실의 청소년출입 뮤인등 변태영업▲전자오락실의 사행성 프로그램설치 ▲유흥업소의 변태영업및 호객행위 ▲만화가게등의 음란물 취급행위등을 종점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6. 유해매체물 심의

‘가위질’ 보다는 등급제로／김선주 논설위원 (아침햇말)

한겨레신문 96.05.01

이재현씨는 일체의 겸열제도에 반대하는 문화평론가이다. 그는 <씨네 2 1>에 낸 글에 서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겸열장치만으로도 벼겁고 혼란스럽다”고 했다. 예술활동이나 혹은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의 폭이나 깊이 혹은 상상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를 바란다. 일체의 구속이나 선입관, 기성관념이나 고정관념의 억압없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창조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판단의 잣대가 자유스런 상상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창작자들의 당연한 욕구라 할 수 있다.

○상상력 죽이는 겸열제도

최근 영화감독협회와 영화연구소와 관련 교수, 평론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의 사전겸열제도 철폐운동은 바로 이러한 영화예술종사자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겸열장치만으로도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표현능력에 한계를 느끼는 데 더해 가위질이라는 이름의 겸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상상력은 위축되고 빙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가요나 출판물에서는 사라진 가위질을 영화에 대해서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상매체만은 사전심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심의 철폐를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완성된 작품에 대한 가위질을 반대하는 것일 뿐 청소년 보호의 대의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사실상의 겸열인 사전심의를 폐지하되 심의기구는 오직 등급만을 구분해주는 본래의 심의기능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다폭력이나 섹스장면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영화는 별도의 성인전용 등급의 극장을 만들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등급제를 외면하고 왜 가위질로 영화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꺾으려 하느냐는 것이다

실상은 공륜이 청소년을 위해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영화의 몇장면을 자르는 일일 뿐 그것의 유통구조나 청소년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선 무신경하다. 청소년의 80%가 아무런 제재없이 성인용 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고 비디오방에 가서도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어떤 신분증도 요구받는 바 없이 에로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이런 유해환경에 대한 행정적 제재나 단속없이 편리하게 예술작품을 가위질로 유린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공륜이나 행정당국의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의 참가작 및 최우수 신인감독상 후보에 오른 영화 <유리>

를 놓고 공륜이 별인 해프닝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영화 가운데 구도중인 스님 이 파계하는 장면이 나오자 불교계 인사들을 불러모아 시사회를 연 다음, 봄바 불교계에서 반대하니까 이러저러한 장면을 잘라야 심의필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륜에 발목이 잡혀 영화제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공륜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해외 출품작에 한해 무삭제 통과를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손으로 만든 영화를 외국인에게는 그대로 보여도 좋지만 한국인에게는 안된다는 것은 무슨 것인가. 참으로 선정적이고 유해한 것은 ‘젖소부인 이랬네’ ‘파배기 부인어쨌네’ 따위 선정적 제목의 영화다. 몇몇 장면을 자르고서는 젖소니 암소니 하는 제목을 손질하지 않은 채 공륜은 검열필 도장을 찍어준다. 이처럼 선정적으로 청소년을 자극하는 영화 제목이 어디 있을까.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빌려보는 영화가 바로 이러한 영화들이다.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대낮에’라고 가위질을 했다고 한다. 공륜이 부부관계는 깜깜한 밤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단하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 청소년은 이미 ‘노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통신법이 발효되어 이미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화나 비디오는 물론 유선방송이나 공중파방송까지도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판되는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소위 브이칩을 장착하게 되어 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선방송 등에서 방영되는 영화가 거의 등급심의나 시간대의 구분없이 방영되고 있다. 첫 방송은 시간대의 제약을 받지만 수십번씩 틀어주는 재방 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방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방송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의 등급화 문제가 곧 제기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보인다.

영화의 사전 검열제도를 등급심의로 바꾸는 것만이 영상매체 시대에 합리적으로 영화를 심의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음란인쇄물 등급제 도입 시급

중앙일보 96.05.01

음란영상을 못지 않게 음란인쇄물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어 간행물등급제도 도입 등 대책이 시급하다.

3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될 연세대 신방과 서정우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여체사진집이나 성기교를 소개하는 간행물은 94년도 5종이었던 것이 95년에는 25종으로 400%의 증가세를 보였다. 95년 간행물윤리 위원회의 제재결정을 받은 음란·폭력도서도 94년보다 43% 증가한 총 1백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교수는 『95년 들어 단행본 누드사진집 발간이 불을 이룬데다 대중오락지에도 여고생의

성체협 기사, 노골적인 정사장면을 담은 사진등 성관련 기사 게재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간행물 등급제도나 폭력·음란물 규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모든 간행물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외국간행물의 수입·판매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 「어린이 - 청소년특별위」 신설

세계일보 95.05.02

◎전문가 의견수렴 올바른 정책제시／「방송현장」 제정 검토… 공청회도 준비청소년의 방송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최근 어린이·청소년 방송 및 프로그램의 제반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방송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 방송특별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방송정책에 관한 사항 △어린이·청소년방송관련 심의 및 시청자 불만처리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및 편성정책방향 모색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방송특위」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린이·청소년 방송현장」과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기준안」「어린이프로그램 등급 및 폭력경고표시제」 등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방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및 학계 언론계 청소년단체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방송특별위원회」와 「어린이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청소년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천방송위원회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수남
색동회회장 △위원 김재은(대교육심리학과 교수) 전대연서울YMCA회장 김영환한국특수
교육협회회장 심영희한양대사회학과 교수 강지원사범연수원교수 △간사 안정임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 ◇어린이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위원장 조강활동아일보논설위원 △위원 김호
영전KBS교육 국장, 성완경인하대미학과 교수 이순형서울대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백미숙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간사

청소년용 비디오 심의강화..공윤, 자문회의 구성

중앙일보 92. 2.14.

공연윤리위원회는 저질, 토폐 비디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개선안에서 현재 1명으로 돼있는 상근위원을 3명으로 늘려 상근심의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청소년용 비디오심의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한국부인회 등 8개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심의회의 운영회의 결과를 심의

에 반영하게 된다.

이밖에 인원이 늘어나게 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만화, 활극 등으로 세분, 심의의 전문화를꾀하도록 했다. 비디오 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심의는 심의 편수 과다(지난해 5천7백16편), 심의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7. 유해환경 단속

학원폭력 집중 단속 / 여름방학 앞두고 경향신문 96.06.02

경찰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파출소별로 일일이 「학교폭력 근절 추진 대책 협의회」를 설치, 가동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 추진 대책 협의회에는 시·군·구 공무원 및 청소년 선도 위원회, 방범봉사대 등 3만 2천 5백 37개 민간단체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경찰은 이 협의회 아래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주관하는 「교외 폭력 단속반」과 방범과장이 지휘하는 「유해환경 단속반」을 둘 활동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일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동으로 담당 구역을 지정,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해업소는 물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파출소에는 학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용 전용전화도 설치키로 했다.

학원폭력 집중 단속 /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 경찰청 서울신문 96.06.02

경찰청은 1일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까지 학원폭력 배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파출소별로 시·군·구 공무원 및 청소년 선도 위원회·방범봉사대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 추진 대책 협의회」를 구성,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일선 경찰서에는 유해환경 단속반을 편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책임 단속 구역을 지정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종업원으로 고용한 유흥업소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찰서 및 파출소마다 학원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신고전화가 설치됐다.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학원폭력 근절위해／경찰청
서울신문 95.09.16

◎불량서클·금품갈취 등 발본

경찰청은 15일 학원주변 불량배의 금품갈취와 폭력행위가 만연해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1월22일까지를 「학교주변 폭력배 일제소탕」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하교길의 학교주변 폭력행위 ▲학교내외 불량·폭력서클 ▲학원가 및 독서실 주변 금품갈취등 폭력 ▲분드등 환각물질 흡입 ▲강제추행등 성폭력 ▲청소년들의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 출입등을 중점 단속하고 오락실·만화가게·비디오방·락카페등 미성년자 혼숙장소를 제공한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환경파괴사범을 특별 단속키로 하고 단속사각지대가 없도록 공중 사진촬영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호화별장·러브호텔등 개발제한구역의 국토훼손행위 ▲공장 폐수·병원 폐기물·가축분뇨등 폐기물 불법투기 ▲특정폐기물 전문처리업소의 유독폐기물 불법처리 등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파괴사범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5백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영업 처벌강화 세무조사
동아일보, 1990. 10. 25

내무부는 지난 8월 문교부가 전국각급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에서 반경 2백m이내)안에 있는 총 2만8천9백76개소의 각종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중 2천8백27개소(조사 대상의 9.8%)가 유해업소를 판정됨에 따라 이들 유해업소를 모두 카드로 정리, 집중단속과 정화활동을 전개.....

내무부는 정화구역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현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돼있는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명단을 공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상습고질위반업주는 구속과 동시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학부모포함 전담반 배치
조선일보 1990. 10. 26

내부무는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언」 후속조치로 각급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연말까지 완전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6일 열리는 각 시도 보사국장회의와 시도교육위 학무국장회의를 통해 유해업소 정화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단속근거가 되는 학교보건법개정을 추진, 현재 학교정화구역내 설치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자오락실 이발소 다방 만화가게 음반가게 특수목욕탕등의 신규허가를 대폭 규제할 방침이다.

또 경화구역내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처벌조항을 강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고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대중음식점의 유흥접객영업 및 성인오락실의 청소년 출입목인행위 ▲전자오락실의 도박성프로그램 설치 ▲만화가게의 음란-불법비디오 상영 및 음란도서취급 ▲이발소 칸막이설치 및 퇴폐음란영업과 음란잡지비치등이며, 적발된 업주는 구속수사기로 했다

「교육영향 평가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교육자와 학부모들을 위원으로 한다는 것도 잘하는 일인것 같다.

문제는 주택, 학교, 향락업소 등이 뒤틀리게 되어있는 것이다. 도박장과 환락가를 사막의 한가운데로 몰아낸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처음부터 주택가와 유동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도시를 개발해야 했다. 토지의 「용도구역제」는 왜 낮잠을 자고 있는가?

무허가유흥업소 강제철거키로

조선일보 1990. 11. 1

서울시는 10일 범죄와의 전쟁에 따른 우해환경정화방침에 따라 퇴폐이발소에 이어 무허가유흥업소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 강력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시내 1천9백여개의 무허가유흥업소중 우선 10평이상인 8백26개업소에 대해 21까지 자진폐쇄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26일부터 강제폐쇄에 나서는 한편, 업주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무허가영업행위로 형사고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대상업소의 시설물을 봉인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며 불법업소라는 게시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학교주변 불법 영업 3백 8곳 적발

중앙일보 1990. 11. 2

경기도경..... 경찰 및 일반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등 2천3백여명을 동원, 도내 유흥업소, 오락실, 당구장등 학교주변 식품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 출입 묵인, 시간외 영업등 불법영업을 한 3백8개업소를 적발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 출입 1백23, 변태영업 1백5, 시간외 영업 56, 무허가영업 15, 퇴폐음란영업 2개소 등이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백26개소로 가장 많고, 전자오락실 46, 만화가게44, 숙박업소 34, 당구장 22, 다방 19, 일반유홍음식점 6, 무도유홍장 2개소등.

미성년자의 출입을 묵인한 사실이 두차례나 적발된 혐의로 수원시 팔달로2가 FX디스코장 주인 노민자씨(43·여)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수원시 남창동 나그랑카페주인 김진원씨(34)등 1백 8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퇴폐업소 앞으론 강제폐쇄

서울신문 1990. 11. 29

검·경활동단속반등을 편성, 집중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단속반의 눈을 피해가며 음란·퇴폐영업을 일삼고 있고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명의만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범죄 및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8일까지 서울에서만도 5천8백22개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6백82개 업소는 고발되고, 3천51개업소는 영업정지, 63업소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1천9백5개로 가장 많았고 음란퇴폐업소 7백61개, 무허가업소 6백개, 사행행위업소 14개, 기타업소 2천5백42개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주인들이 대부분 불구하고 입건된 상태여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이를 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고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형사처벌과 아울러 행정관청의 협조를 받아 간판제거·시설물봉인등 보다 강력한 강제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趙圭政대검형사과장은 28일 「공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거쳐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영업을 계속해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국·구청등 일선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업소를 폐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소들은 불법영업을 하다가 다시 형사고발을 당하더라도 앞서 고발한 사건의 송치 기간안에는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어 행정당국이 3개월마다 경기고발만 계속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 벼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정당국은 무허가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해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조선일보 1990. 12. 6

경기도 수원시는 5일 지난 11월 한달동안 학교주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내의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절대구역내에서 퇴폐 및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영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2백20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1백26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76개 업소는 경고 및 시정, 18개 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시는 또 상대구역내의 쓰레기하치장, 공해시설, 속박업소등 1백 55개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시청 학교 등사무소 파출소등에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관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

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적발된 2백20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변태, 퇴폐업소가 94개로 가장 많고 영업시간 위반 32개소로, 무허가 32개소, 기타 76개소 순이며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은 카페등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1백 45개소, 유홍업소 32개소, 이용업소 16개소, 전자오락실 3개소, 기타 3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정비대상 1백55개 업소는 대중음식점 58개업소, 전자오락실 42개소, 만화가게 35개소, 이용업소 9개소, 숙박업소 5개소, 기타 6개소 순이다.

심야영업 2번 적발엔 허가취소

조선일보 1991. 4. 14

서울시는 13일 22개 구청장회의를 열어 아직도 단속을 피해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처벌강화지침을 시달했다. 서울시는 과정금부과 위주의 행정처분에서 벗어나 앞으로 1차례만 영업시간을 어겨도 형사고발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특히 퇴폐-변태영업에 대해서는 1차적발 때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홍업소의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본청과 구청에 22개조 1백31명의 「유해환경근절 특명기동반」을 편성, 상습적으로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퇴폐행위를 일삼는 대형업소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유홍업소의 탈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작년 10월 13일 이후 6개월간 모두 1만 9천 5백 8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

퇴폐영업 벌금 5천만원

조선일보 1991. 7. 13

내무부는 7~8월을 하절기 특별중점단속기간으로 설정, 특별상설기동단속반과 지역순찰반 등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단속반과 경-검찰 교육청 세무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관광지 유홍업소밀집지역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형나이트클럽 업주 7명영장

경향신문 1992. 2. 12

서울경찰청 강력과는 11일 고교생등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술을 팔아온 서울 청량리 맘모스호텔 나이트클럽(주인 이종문 50)동 시내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2개소와 대형 디스코텍 5개소를 적발, 이들 업소주인 7명을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소년 탈선조장 <노래연습장> 규제키로..내무부

중앙일보 92. 2. 15

내무부는 14일 최근 서울,부산등지에서 새로운 청소년 탈선장소로 물의를 빚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은 1.5평 규모의 좁은 칸막이 공간에 무인영상반주장치(속칭 비디오케 기구)를 설치, 손님들이 이 기구에 동전을 투입해 원하는 노래번호를 누른 후 반주가 흘러 나오면 비디오화면의 가사를 보면서 마이크를 잡고 혼자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업소는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심야영업을 일삼아 발생을 빚고 있는데다 관계법에 단속근거가 없는 틈을 타 서울,부산등지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가 주변 유해업소 업주 134명 적발

중앙일보 96. 1. 25.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7시부터 4시간동안 학원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벌여 사행성 오락기인 '투전기' 31대를 설치, 불법영업을 한 박만수씨(42, 서교 오락실 업주) 등 134명을 적발, 이 가운데 박씨를 사행행위등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인 이모군(17) 등 2명에게 성인용 비디오를 보여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M 비디오방 주인 최모씨(36) 등 60명을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5명을 즉석에 넘기는 한편 모두 8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8. 정부의 유해환경 대책

유해업소 한달 10일 이상 단속／안전한 학교환경 조성대책 내용

서울신문 96.03.08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불량식품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실장 강봉균)은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좌담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총리실은 추진상황을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평가해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과제별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경찰이 중심이 되어 유홍업소와 비디오방·숙박업소·전자유

기장 등 학교주변 어린이대상 풍속사범을 집중단속한다. 6월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까지 매달 10일이상 집중단속한다. 행정조치도 병행, 1 단계로 4 월까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하고, 2 단계로 5 월까지 명단을 인·허가기관에 통보한다. 이전대상업소는 명의변경및 증·개축을 일체 금지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감시역량도 총동원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유해환경 상설고발센터를 운영한다.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2000년에 끝마치기로 한 2천8백82개 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98년까지 앞당긴다. 2 천 2 백 3 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2000년까지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도로표지와 안전표시등을 우선 설치하고,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을 어린이 평균보행속도를 기준으로 늘린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차도에서 어린이가 횡단할 때 제차정지의무화규정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제차 일시정지의무화규정을 신설한다.

▲건전여가활용을 위한 어린이 체육시설확충=올해 유휴교실 6 백48개에 탁구장과 기초체조장 등을 만들어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한다. 체육관이 없는 지역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올해부터 매년 60개씩 새로 짓는다.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을 방과후에 적극 개방한다.

▲학교폭력근절방안=각 학교는 3 월중 우범학생명단을 파악, 검찰과 경찰에 자료를 협조한다. 가벼운 우범학생은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선도하고 문제학생은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우범정도가 심한 학생은 학교담당 지도검사나 전담검사 책임 아래 면담, 선도하고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한 학생은 법원소년부에 통고한다.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특히 등·하교시간대 순찰을 강화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확보=학교주변 식품관련업소및 다중이용시설에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엽서함을 비치, 위반식품 및 업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 신고한 내용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지조사, 조치하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준다.

PC통신 음란물 강력 규제／정부 곧 처벌 근거 마련 중앙일보 96.03.28

정부는 27일 문화체육부 회의실에서 이수성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청소년유해환경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이경문 문화체육부 차관)를 열고 청소년 유해음란·폭력·영상·인쇄물 및 유해약물·퇴폐업소 출입등에 대한 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PC통신이나 인터넷등에 올라오는 음란·폭력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기존의 PC통신망 불건전 정보신고센터와 모니터링 자원봉사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불건전정보 접속방지 소프트웨어」도 개발, 보급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음란·폭력물을 올려 놓는 불건전정보유통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청소년 카드」 도입 추진／음란·폭력 영상물등 처벌 특별법 제정도
한국일보 96.05.15

◎문체부 해외여행·문화행사 관람 때 할인 혜택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 폭력성 영상·인쇄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청소년들이 해외여행이나 문화행사 관람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Youth Card) 제가 운용된다. 문화체육부가 14일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음란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쇄매체와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청소년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제정중인 이 특별법은 감시와 단속, 처벌권을 망라한 강력한 법률로 주로 음반, 비디오, 영화, 공연, 도서, 방송, 만화, 유선방송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문화·예술 관람이나 국내외 여행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제의 도입을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300만명의 청소년이 가입, 시행되고 있는 이 청소년 카드는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할인과 함께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계화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은 이날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소년 비행조장 엄벌／김 대통령／폭력만화 등 끝까지 추적
국민일보 93.05.21

김영삼대통령은 21일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어른들자신의 도덕적인 자기경화,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청소년을 비뚤어진 길로 인도하는 어른들의 부도덕한 일체의 범죄행위는 단호하게 중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황인성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민간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소년 선도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건강한 청소년을 만드는 것이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직업소개소에서 폐폐유홍업소에 미성년자를 알선하거나 업소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소위 오렌지족의 폐폐한략적인 소비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폐폐및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량만화나 비디오등을 끝까지 추적해 추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유해내용과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있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렌지족」 출입업소 단속／정부／청소년 유해환경 일제정화
동아일보 93.05.22

정부는 21일 청소년 선도를 위해 폭력을 미화하거나 지나친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불량 만화나 비디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운동을 펴고 미성년자를 완전고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오렌지족의 퇴폐향락적 소비풍조를 바로잡기위해 퇴폐 및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폐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해내용과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규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을 비뚤어진 길로 인도하는 어른들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중벌로 다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어촌지역의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각 산업분야별로 몇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문기술학교를 세워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선도, 유해환경 정비부터 (사설)

서울신문 93.05.22.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바으로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대한 설계요 경영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총리와 관계부처장관 및 청소년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소년선도대책보고회의는 새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대책을 내놓았고 내무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대책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학생비행예방과 선도대책을, 노동부와 보건사회부는 근로청소년과 불우청소년 복지대책을 각각 밝혔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 정책은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청소년 문제를 생각하고 힘을 합쳐야만 건강한 청소년 문화와 미래를 확보해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환경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 한복판까지 과고든 술집, 학교주변의 만화가게, 음란비디오, 전자오락실등만이 청소년 유해환경은 아니다.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개방돼 있는 텔레비전 및 인쇄매체의 음란·폭력내용, 성인들의 과소비풍조도 유해환경이다. 등·하교길의 여중생을 인신매매단의 표적이 되게하는 「인면수심」 어른들의 「영계술집」과 악덕 상업주의, 영웅호색이라는 왜곡된 대장부의 기개는 더욱 고약한 청소년 유해환경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같은 유해환경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유해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해쳐져야 한다.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교육제도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청소년 대책에서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이야말로 견진한 청소년 육성, 지덕체의 균형된 발전을 가로 막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입시에만 얹매이지 않고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과 입시제도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범 국가적인 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 사회가 가진 최선의 것만이 청소년 세대에게 주어질수 있을때 청소년 정책은 성과가 가능하다. 신뢰받는 부모, 존경받는 스승, 질서와 기강이 바로잡힌 사회속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내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수범을 보이고 책임을 분담한다면 청소년 선도의 초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퇴폐업 뿌리뽑을 “극약처방”

중앙일보 1991. 3. 12

한남동 구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건립이 예정된 연합교육원에 22개 업종별협회의 서울시 지부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협회운영예산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서비스업종사자 의무교육제(최고6개월)등을 본뜬 것이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제까지 서울시동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온 전국의 유홍·유기업소등 범인(犯因)성,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경찰에 맡긴 것으로 최근의 퇴폐·유홍업소 집중단속이 일시적이 아니며 한층 더 강화한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십야·퇴폐영업유홍업소 단속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이 법률을 근거로 이들 단속업무를 경찰주관으로 전환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이발소 3등급 분류

조선일보 1991. 3. 26

서울시는 25일 「작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 허가취소조치를 통해 정비했으나 최근 단속소홀을 틈타 퇴폐행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

9. 청소년보호특별법

청소년보호 특별법 제정/이총리지시/우범학생 경경에 통보
한국일보 96.03.08

이수성 국무총리는 7일 취임후 처음 가진 국정좌담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를 법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특별법제정과 관련법규개정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사범을 근절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좌담회에 참석한 조영승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을 비롯, 청소년단체대표등 청소년문제전문가 14명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폭력음란물 특별규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참석자들이 건의한 공연물과 간행물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의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검토해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건의내용중 문화체육부를 문화체육청소년부로 명칭변경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영수 문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총리행정조정실은 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책으로 이달중 중·고교 우범학생을 학교별로 파악, 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폭력서를 가담등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한 학생은 전담검사를 통해 법원 소년부에 통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범정도가 가벼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자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선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특별법」 제정/정부방침/초중고 주변 유해환경 척결
세계일보 96.03.08

◎음란 영상 - 인쇄매체 등 처벌강화/우범학생 파악… 경경에 명단통보/어린이 횡단때 모든차량 정지 의무화/이 총리, 김 문체부 장관에 입법지시 정부는 7일 최근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마약복용 폭력 성추행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척결하기 위해 가칭 「청소년 유해환경 방지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비행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학교주변 유홍업소와 간접적으로 성충동을 유발시키는 일부 영상 - 인쇄매체에 대해서 차율적으로 제재가 되지않을 경우 특별법제정을 통해 영업취소나 발행정지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이들에게 음란잡지나 비디오, CD롬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청소년문제전문가들을 초청, 국정좌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나 음란물소지등의 요인이 되는 영상 - 인쇄매체들이 자율적으로 심의가 안된다면 타율로라도 심의가 강화돼야 하며 그러한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 청소년유해 환경을 제재키위한 구체적인 법제정을 검토하도록 배석한 김영수문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와함께 비행청소년 문제와 관련,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별으로 우범학생을 일제히 파악, 관련자료를 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우범정도가 가벼운 학생에 대해선 학교 자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선도하고 폭력서클 가담등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한 학생은 전답검사가 별월소년부에 통고토록 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할 때 모든 차량의 경지의무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모든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외에 별점율 함께 부과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백미터역을 대상으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앞당겨 각각 98년과 2000년까지 약 2천 9백개교와 2천 2백여개 유치원에 대해 지정을 완료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 특별법」 추진／음란 영상물 등 처벌규정 강화／문체부 동아일보 96.05.15

◎ 「청소년카드」 도 도입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 폭력성 영상과 인쇄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청소년들이 해외여행이나 문화행사 관람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 (Youth Card) 제작이 윤용된다. 문화체육부가 14일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음란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쇄매체와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

올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청소년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제정 중인 이 특별법은 감시와 단속, 처벌권을 망라한 강력한 법률로 주로 음반 비디오 영화 공연 도서 방송 만화 유선방송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문화 예술 관람이나 국내외 여행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제의 도입을 추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3백만명의 청소년이 가입, 시행되고 있는 이 청소년카드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할인과 함께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 특별법」 만든다／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국민일보 96.05.15

◎ 「청소년카드제」 내년 윤용

음란 폭력 인쇄물과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또 청소년들이 해외 여행이나 문화행사 관람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Youth Card)제가 내년부터 운용된다. 문화체육부가 14일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상 경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음란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쇄매체와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 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단속, 처벌권을 강화한 법률로 주로 음반 비디오 영화 공연 도서 방송 만화 유선방송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책을 위해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카드제를 도입,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카드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비,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료, 생필품 구입비에 대한 할인혜택과 응급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음란물 미성년 대여땐 형사처벌 등 제재강화／당정, 법제정키로 한국일보 94.10.31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음란·폭력영상물과 만화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폭력을유통규제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법안에서 음란·폭력영상물을 성인용 및 청소년 시청절대금지물로 엄격히 구분,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란·폭력을의 판매와 대여 열람 진열자동판매 우편판매 광고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음란·폭력을물을 판매·대여한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몰수규정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반 공무원에게도 음란·폭력을의 실태조사와 단속권한을 주기로 했다.

음란·폭력을 규제법／당정 이번회기 처리 중앙일보 94.10.31

정부와 민자당은 급증하는 청소년범죄와 관련, 음란 폭력영상물과 저질만화등 유해환경을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음란 폭력을유통 규제에 관한 법안」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문화체육부와 민자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중인 이 법안은 음란 폭력을의 판매와 대여·열람·진열·자동판매·우편판매·광고등을 금지하고 아울러 외제음란물등의 수입과 복사, 번역 배포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풀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음란 폭력을물을 판매·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몰수규정도 두기로 했다.

10. 유해환경 시민감시단

시민단체, 의식개혁운동 빨벗고 나섰다

세계일보 95.12.29

◎경실련 - YMCA, 윤리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각단체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실질적 활동펴야”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의식개혁운동이 정착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주도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문민정부도 과거의 권위주의정권들이 애용했던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의식개혁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중인 제도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경실련과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식개혁을 주요활동과제로 삼고 있다. 의식개혁운동은 「시민의무」, 즉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서울YMCA는 내년부터 「시민의식 만들기」(가칭) 운동에 나선다. 정치권과 기득권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본활동과는 별도로 의식개혁운동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방침이다. 오재관시민사회개발부장은 『시민운동의 목표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구성원을 만드는데 있다』며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많은 시민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송병국 연구원도 『도덕성 회복은 구호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직장인들이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가정과 직장내의 진정한 윤리회복이 선행돼야 하며, 공중도덕과 질서를 요구하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도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혁의 성공은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에 있다고 보고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환경개선노력도 하나의 방법이다. 환경유해제품을 적발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정계운동보다 소비자의 의식을 전환하는 교육운동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도 시민교육의 장으로 유용하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고 이웃과 사회의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구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청소년 대상의 건전한 놀이마당을 제공하는 일도 시민운동의 자발적인 활동영역이다. 사회문제전문가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체제에서 재야운동은 곧 반독재운동이었다』며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중인 현시점은 현실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금융실명제 요구는 시민단체들의 성공적인 운동사례로 꼽힌다. 어떤 의미에서 시민단체들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요세력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 관심의 초점은 오늘의 시민운동이 도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 관건은 시민정신의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지도자들에 따르면 시민정신은 권리의 행사 만큼 봉사의 제공이 중요하며 개인의 이익과 일반대중의 요구가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손봉호 교수 (서울대 사회교육) 는 『시민운동의 최

우선 과제는 정부와 기업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라며 『권력자는 감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의식개혁은 부정을 고발하고 정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전략의 부재로 인해 의식개혁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미타이 에치오니 (미정치사상가) 는 『우리가 시민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지탱하지 않는다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우리가 당면한 위협은 도덕적 혼란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의 가정과 공동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봉파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도덕성 회복」 운동에 도전할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주체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모색하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 소비자분야 팔목한 성장/시민단체 현황과 실태/38개단체 협의체인 「한국시민단체협」 이 큰 주류/재정 - 지방조직 취약불구 각부문서 눈부신 활동

우리나라 순수시민운동은 91년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됐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현대정신을 기초로 93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결성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후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운동연합 YMCA 한국소비자연맹 홍사단등 38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민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및 소비자 환경 의료건강 교통 성폭력 교육등 분야별로 세부단체를 만들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체별 운동의 명맥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재정형편과 지극히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조직체여서 유기적 연대가 여전히 힘들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 시민운동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소비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운동은 78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되고 80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 급속하게 발전, 95년 현재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단체로 재정경제원에 등록2된 민간단체는 YMCA한국소비자연맹 YMCA등 13개다.

그러나 이를 단체는 지방하부조직이 거의 없는 상태일 뿐더러 재정형편이 미약해 단체 운영이나 소비자보호사업 전개도 벼거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순수한 경제운동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사회분위기가 다소 자유스러워진 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 의 출현으로 시작된다. 경실련은 창립 당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는 「얼굴만 바꾼 운동권」, 재야운동권으로부터는 「개량주의적 운동단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6년여 활동 결과 사회적 공신력과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는 게 중평이다. 특히 출범 당시부터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의식개혁운동 공명선거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경주, 상당 부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95년 말 현재 1만 2천명의 회원과 전국 36개시·군에 지부를 두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원의 참여도는 아직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다. 사무국 간사나 전문가 중심의 운동보다는 밑에서 위로 이어지는 상향식 조직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점도 이 때문이다. 한때 기업인으로부터 충당되는 특별현금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50%를 넘어서 시민단체로서의 주체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없지 않았으나 95년도에는 회비와 사업수입, 특별현금예산의 비율을 30:30:30으로 나누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8년 자연보호 및 핵추방등을 중심과제로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환경운동은 95년 11월 말 현재 단체수만 범인체 71개, 시·군에 신고되어 있는 단체 1백13개, 임의 단체 22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93년 창립돼 대대적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민간기금모금센터를 설치, 환경운동기금조성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인터뷰／경제정의실천연합 유재현 사무총장／“경제개혁 촉구활동 주력”／환경보호홍보교육도 강화『시민운동은 다른 말로 시민이 주체의식을 갖자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제3의 힘」으로 성장할 것입니다』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은 28일 시민운동의 미래를 이같이 낙관하고 『하지만 의식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제도개혁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실명제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지만 자금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이 보장되지 않고선 「맑은 사회」가 가능하겠느냐』며 『부동산투기가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일부의 자본집중이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총장은 이어 『경실련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촉구하고 주요 정치·사회 쟁점들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환경교육 교통 등 부문별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성공사례로 삼푸나 나무젓가락의 사용감소를 들었다. 기업주와 소비자는 오늘의 환경문제에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매사를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협력을 유도해 환경 또는 유해상품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총장은 『우리사회는 직접민주주의로 향하는 길목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날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증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선진국 시민단체 「그린피스」 무슨일 하나／세계환경 파수꾼… 71년 캐나다서 출범／활동예산 99% 회원 기부금으로 충당선진국의 대표적인 시민환경운동단체로는 「그린피스」를 든다. 그린피스는 7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핵실험에 반대하는 베트남전 정용기피자와 인디언보호주의자들이 모여 출범시켰다. 캐나다 실업인 테이비그 맥 타거트가 초대회장을 맡아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 그린피스를 세계최대의 환경단체로 성장시켰다.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린피스는 통신본부를 런던에서, 자금본부를 함부르크에서 운영한다. 상근직원만 8백여명이고 전세계 30개국에 걸쳐 총회원수는 5백만명에 달한다. 활동예산의 99%를 회원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린피스는 연간 1억 5천~

1 억 7 천만달러 (1 천 2 백억 ~ 1 천 3 백60억원) 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린피스 회원들은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무모하다고 인식될 만큼 저돌적이고 혐신적이다. 그린피스는 창립후 23년간 프랑스가 강행해온 무투로아 환초 핵실험 저지를 위해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핵실험 때는 전세계 회원들이 요트를 동원해 시위를 벌여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서울 YWCA／음란만화·잡지 추방나선다

서울신문 94.03.28

◎모니터요원 등 1천여명이 「감시단」 결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대적인 감시활동이 시작된다. 이는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를 통한 도박, 음란물등이 범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YMCA(회장 박정희)는 28일 하오 2시 서울 명동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명동일대에서 유해환경 추방캠페인을 벌인다. 모니터 요원등 1천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4월 모니터요원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가동돼 다양한 활동을 펼쳐 된다. 이들은 만화·잡지등 인쇄매체와 텔레비전·비디오·음란디스켓등 영상매체, PC통신·유료 음성정보서비스등 통신매체등 매체별 협의회를 통한 감시활동과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등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감시단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협의회는 2~3개의 모니터회를 운영하고 주 1회 모임을 통해 모니터한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 검토·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모니터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보고서 작성과 모니터 요원 재교육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YWCA는 감시단의 활동과 함께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돋기위해 다음달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전화창구」를 개설,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시정요구에 이어 관계기관 고발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족／저질 비디오·만화 등 연중 고발

국민일보 94.03.29

◎서울YWCA가동

서울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28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박정희 서울YWCA 회장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전한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감시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인 및 청소년 모니터요원 1천명으로 구성된 이 감시단은 올해 말까지 인쇄매체 (만화도서 스포츠신문) 영상매체 (비디오 TV음란디스켓 오락프로그램) 통신매체 (PC통신 유료정보서비스) 등 3개 매체 7개분야 및 학교주변

향락업소등 유해시설을 감시하게 된다. 감시단은 매월 1회 이상 세미나와 평가회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총체적 자료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의 고발을 받는 「지킴이 전화」를 개설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추방”／YWCA 감시단 발족
경향신문 94.03.31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등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한 도박·음란물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단체가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서울 YWCA(회장 박정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명동본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음란만화·잡지등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모니터 요원등 1천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4월 모니터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가동돼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인쇄매체(만화·잡지등)와 영상매체(TV·비디오·음란디스켓등), 통신매체(P C통신·유료음성정보서비스등) 등 매체별 협의회를 통한 감시활동과 청소년유해시설에 대한 감시단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협의회는 2~3개의 모니터회를 운영하고 주1회 모임을 통해 모니터한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 검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Y는 「지킴이 전화」(02-318-7158)를 개설, 일반 시민들의 고발도 받는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시경요구에 이어 관계기관 고발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만화 가장 위험… 「우량」 육성 지원 필요
국민일보 94.07.05

©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1차보고회

서울 YWCA는 지난 3월 발족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제1차보고회를 5일 오후 서울 Y묘우당에서 갖고 청소년관련 만화·음성정보서비스, 컴퓨터게임을 중심으로 유해성의 실태를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매체는 만화. 청소년 만화구독 실태 및 내용분석결과를 발표한 신창중 박장환교사는 「저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문화의 중요영역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만화는 성인용 만화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 일본만화의 범람으로 유해성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화평론가 김이랑씨는 우량만화육성방안으로 만화가 및 만화출판지원방안 수립, 우량만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불량저질 국내·외국만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법감시실시, 해당부서에 청소년문제 및 만화전문가 채용, 출판시장 개방에 대비한 수입업자 만화육성기금 부담 방안 검토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운동／시민들 자발참여 확산

세계일보 94.07.28

◎홍사단 「감시단원 교육」에 주부 - 학생 대거 몰려／퇴폐영상물 고발등 바른교육 여건 조성 앞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고발활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사단부설 청소년연구원(원장 윤세궁)이 청소년들이 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인쇄 - 영상매체와 본드 부탄가스 등 약물, 퇴폐 - 유홍업소에 대한 감시 -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하려는 시민감시단의 감시단원교육에 주부 학생 교사 일반시민등 참여폭이 다양하다. 청소년연구원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 1백30명에 대해 1~3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중순에는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에 게도 추가 교육을 실시해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로 9월10일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원은 앞으로 청소년 주변의 퇴폐 - 향락적인 상업환경을 수시로 감시 고발하는 한편 선정적인 벽보 제거, 유해약물 퇴치운동 등 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들은 또 대중매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8월중 네 차례에 걸쳐 영상매체와 인쇄매체에 관한 모니터 교육을 받게 된다. 고발은 전화(763-0441)나 팩스(743-2515), 우편(서울종로구동충동 1 의26 홍사단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을 이용하거나 하이텔 컴퓨터통신망도 활용할 수 있다. 홍사단의 김송희연구원은 『93년 말 개설된 유해환경고발센터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과외학습 등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유해환경 척결에 공동전선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우리가 추방”／홍사단 감시단 발족…본격활동 나

세계일보 94.09.12

◎학교주변 유홍가 등 고발 정화키로

홍사단이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환경에 대한 감시, 고발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사단 청소년연구원(원장 윤세궁) 부설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는 10일 오후 3시 홍사단강당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2백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유해환경 정화결의를 다졌다.

감시단원들은 또 일반시민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전단을 배포했으며, 대학로 일대에선 불건전 포스터를 떼어내는 등 거리정화 캠페인도 가졌다.

주부 학생 교사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원들은 청소년주변의 퇴폐 - 향락적인 상업환경을 수시로 감시 고발하는 한편 선정적인 벽보제거, 유해약물 퇴치운동 등 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

또 유홍가 사창가 오락실 당구장 만화가게 노래방 등의 시설, T V비디오 영화 유선방송 컴퓨터통신 전자게임 등 영상매체와 만화 소설신문 잡지 포스터 광고전단 등 인쇄매체, 불량학용품과 식품 본도 부탄가스 신경안정제 담배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품이나 물품 모두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는 일반인들이 전화(763 - 0441)나 팩스(743 - 2515)우편 (서울 종로구 동충동 1 의28 홍사단 청소년 유해환경고발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혹은 하이텔컴퓨터통신망을 활용, 고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홍사단은 고발이 접수되면 사안의 경종에 따라 관련업소나 기관에 협조 권고문을 발송하거나 검·경찰에 형사고발한다.

대학가 「왜색업소」 추방확산

한국일보, 1992. 3. 18

한양대생들은 최근 한달사이에 학교앞에 록카페 2곳이 들어선데 이어 인근 업소들도 업종전환의 움직임을 보이자 총학생회주관으로 지난 10일부터 록카페퇴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학생들은 대표 50명을 선발, 16일 하오 이들 업소를 방문, 서명지를 전달하고 「퇴폐·불법 영업 록카페를 추방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분간 시위했다.

총학생회는 무허가 업소인 R업소에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당초 허가내역대로 대중음식점으로 업태를 바꿀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교수와 인근주민들로부터도 지원을 얻어 폐쇄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도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지난주 학교주변 록카페·노래업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교문주변 Q업소, R업소등 노래방 4곳과 록카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총학생회는 이를 업소의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이나 항의방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총학생회는 록카페·노래방 추방운동을 대학간 연대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일 서울남부지역 대학 학생복지위원회 대표자들의 모임에서 이문제를 공식 거론할 방침이다. 중앙대, 숙대, 숭실대 등 다른 대부분 대학에서도 주변 록카페나 노래방에 대한 추방운동을 모색하였다.

11. 음란·폭력물

편의점/선정잡지 판친다/음란물 기승… 청소년 유해온상 우려
국민일보 95.06.22

세련된 매장, 24시간 영업으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편의점이 선정적 내용의 잡지들을 판매, 청소년 탈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서울 YMCA 강남지회 출판모니터클럽이 강남지역 편의점 7 군데에서 판매되는 핫원드, 주간만화, 사건실화, 무비(MOVIE), 야담 실화, 액설련트, 영화가이드, 나그네 등 잡지 8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포르노잡지에 가까웠으며 성에 대한 갖가지 묘사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우선 남녀의 직접적 성관계를 묘사하는 경사신이 48.3%로 키스신 (10.93%)이나 포옹신 (40.62%) 보다 더 많이 실려 있었다. 언어적 표현도 전체적 비율은 낮았지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묘사 (39.39%)하거나 성적 관계를 암시(24.24)하는 등 그 영향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핫원드, 사건실화 등 대부분의 잡지들은 일본 여성의 나체사진을 마구 짜깁기해 신거나 성기구, 남성용품을 과장광고하고 그릇된 성지식과 성을 상품화하는 화보 등 청소년에게 위험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비디오의 모든 것」 「절정감의 과학」 등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비디오, 화보, 책 등을 자세히 선전하고 있어 제2, 제3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영상물에 명드는 청소년들
한국일보 95.09.06

◎교내서 「음답패설」 돌리다 꾸중듣자 자살까지/당국 심의 손쉽게 통과·“법규미비” 단속 뒷걸

낯뜨거운 성인용 음란영상물이 서점은 물론 PC통신을 통해 벼젓이 나돌아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PC통신 음란물을 본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자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성인용 음란영상물의 무차별적인 확산이 청소년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더욱이 같은 음란물이나 잔인한 장면투성이의 폭력적인 영상들이 심의 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에서도 손쉽게 통과되고 있고 정부는 법규미비를 이유로 단속조차 포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핫원드」 「프린세스드림」 「하데스」 「산딸기4」 등 성인용 CD 프로그램은 여성의 가슴을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성인영화의 정사장면만을 모아 구성했지만 최근 공륜심의를 통과한뒤 유통되고 있다. 개인용컴퓨터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은 하이텔등 PC통신을 통해 인터넷과 접속해 외국의 대표적인 도색잡지

인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등을 열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H중 2년생인 강모(15) 군이 PC통신으로 받은 음란패설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둘러보다 담임교사에게 적발돼 꾸중을 듣자 투신자살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고교생이 사설게시판에 음란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널리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대금만 받고 물품을 건네주지 않았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음란영상물이 판치는 데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비디오와 달리 CD 영상물은 단속법령이 없어 판매자의 양심에 따를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최수경 부장은 『과거에는 음란물이 라고 하면 비디오가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고교생 90% 일본만화 본다/음란비디오는 60%가 경험 한겨레신문 95.09.21

◎ 7백 50명 면접조사

서울지역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문제’를 꼽고 있으며, 10명중 9명이 일본만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문화센터 광장이 최근 서울지역 남녀 고등학생 7백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의식 및 취미·특기생활 실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20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문제(43.4%)를 첫순에 꼽았으며, ‘부정부패’(15.2%) ‘부실공사’(13.5%) ‘국민성’(10.3%) 등이 그뒤를 이었으며 ‘남북분단’(7.9%) ‘교통문제’(6.9%)를 든 사람도 있었다.

섹스와 폭력 등으로 얼룩진 음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61.3%를 차지했으며, 일본 만화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89.1%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솔리드(12.8%), 서태지와 아이들(8.0%), 이승환(7.0%)씨 등이 꼽혔으며, 텔런트는 이병현(10.2%), 심은하(8.1%), 이승연(6.2%)씨 등이 상위에 올랐다. 영화배우로는 안성기(18.6%) 씨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그 뒤로 최민수, 박종훈, 브래드 피트, 메그 라이언 등 순이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청소년이 14.3%로 가장 많았고 박찬종(12.9%), 조준(12.4%) 김영삼(10.7%), 김대중(10.6%) 씨등 차례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문화센터 광장은 23일 오후 3~5시 서울 건국대 상허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청소년 문화의 새길을 여는 심포지엄’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 서클·C.A·여가선용 실태 분석’(최재식·배화여고 교사) ‘교육개혁안과 청소년 생활문화의 역할’(구정화·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 ‘청소년문화와 대중음악’(김창남·문화평론가) 등이 발표된다.

“일본만화 본적이 있다” 89.1%／서울 고교생 750명 설문조사
동아일보 95.09.23

◎음란비디오 시청 경험 61.3%

청소년 문화는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자기주장이 뚜렷한 것이라고 고교생들은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문화센터 광장이 최근 서울지역 남녀 고등학생 7백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의식과 취미 및 특기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들은 「청소년문화의 특징」으로 「자유로움」(29.1%), 「강한 자기주장」(28.9%), 「뚜렷한 개성」(28.5%), 「이유없는 반항」(16.8%) 등을 들었다.

그러나 「건전한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44.1%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외에는 「주체성 있는 문화」(31.7%), 「윤리적 도덕적 문화」(18.0%), 「건전한 놀이문화」(8.3%), 「학교생활에 충실한 문화」(5.8%) 라고 대답했다. 고교생들은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한국(16.1%)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은 「싫어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일본(61.6%), 미국(8.5%), 북한(4.8%)에 이어 4위(4.4%)를 차지했다.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의 하나로 꼽은 이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광장」의 김남기 대표는 『최근들어 연이어 불거져 나온 각종 부실공사 부정부패 등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89.1%는 일본만화를 본적이 있고 음란비디오를 보았다는 학생도 61.3%에 달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정도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장」은 23일 오후 3시 서울 건국대 상하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문화의 새길을 여는 심포지엄」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도 「교육개혁안 속에서의 청소년 생활문화의 역할」, 「청소년 서울, 특별활동, 여가선용 실태분석」, 「청소년과 대중음악」 등이 발표된다.

박종웅 의원／국감장서 「낯뜨거운」 영상물 시사 (조명)
경향신문 95.09.28

◎컴퓨터 유해환경 직접고발

거침없는 표현과 빠른 말투때문에 「속사포」로 불리는 민자당 박종웅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일 「범람하는 새 영상물」에 대해 집중공격을 펴붓고 있다.

문체공위 소속의 박의원은 27일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새 영상물의 범람에 대해 공륜이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낚달한 뒤 심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충원등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이 강조하는 「새 영상물」은 최근 청소년층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CD롬, CD I, 컴퓨터 통신화면등을 말한다. 특히 「컴맹」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들에겐 생경한 용어들이다. 박의원은 바로 이 점때문에 새 영상물에 대한 입법의 시급함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새 영상물에 대한 기성세대의 무지를 틈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통해 음란·폭력물에 무제한 노출되고 있다는 것. 최근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다가 컴퓨터 음란물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한 박의원은 2개월전부터 한국YWCA의 자문을 구하고 서울 세운상가 등에서 직접 음란영상을 구입하며 자료를 모았다. 그는 유해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D롬, CD I를 편집, 지난 25일 「젊잖은」 국감장에 서 실제 상영하는 충격요법을 쓰기도 했다. 선명한 컴퓨터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꽂뜨거운 장면들을 보면서 동료의원은 물론 문체부 직원들조차 이구동성으로 『아이들 방에서 컴퓨터를 치워야겠다』며 혀를 끊었다. 박의원은 이어 『미국조차 대중 컴퓨터통신망에 음란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품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매체환경에 주무부서가 계속 뒤처지면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유해환경을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그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교육용과 산업용 이외의 컴퓨터영상들도 사전 심사받도록 한다는 양보를 받아내 경기국회에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도동 3세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친 박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 고속철도 경주구간 도심통과 백지화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아 자칫 야당 독무대로 기울 뻔한 국감장에서 균형추노릇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PC통신망 음란폭력물 제재를／오세열 (내가 보기에는)

세계일보 95.12.20

◎단속 법적근거 마련 - 전전오락물 개발 병행해야

음란·폭력물이 범람하고 있다. 불량청소년들이 어슬렁거리는 밤거리의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하철을 타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정신없이 읽고 있는 스포츠신문을 필두로 각종 잡지에도 벼젓이 음란물이 실리고 있다. 여기다 정보화시대답게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수단들도 음란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아예 포르노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으니 노출 정도나 장면의 선정성을 그들과 비교하자면 우리의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문제는 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이들의 묘사와 태도에 있다. 이들은 성을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로만 다루고 있다. 마치 성문제는 경상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최근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은 이미 PC를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청소년 PC통신게임이나 CD롬 타이틀 등 각종 신종 영상물의 유해성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혐오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관계를 갖는 과정을 묘사하는가 하면, 약물복용을 한 여자들이 속옷을 벗어던지는 것도 있고, 온통 살인만 계속되는 광란의 폭력들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결으로 보기엔 모험물이나 스포츠물인데, 게임에 들어가 보면 음란·퇴폐물이거나 시종일관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량 전자게임들이 청소년들에게 성범죄 충동, 여성의 상품화, 살인 등 폭력에 대한 무감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른이 볼것과 아이들이 볼것이 전혀 구분없이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포르노물이 양성화된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청소년들까지 마음대로 보는 곳에다 이같은 음란물을 싣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란물을 뿐만 아니라 뽁자는 식의 일방적인 대안없는 강경론에는 찬성하고 싶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간파한채 어른들의 입장에서만 요구하는 방법은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웃차림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우로워졌고 성에 대한 의식도 많이 개방되었다. 이를 19세기적인 엄격한 잣대로 억누르려 한다면 통할리 만무다. 이런 식으로 억누르게 되면 오히려 음지에서 범지는 것이 예로문화이다. 사실 그동안 청소년 문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방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들은 막연하게 그들의 자녀가 바르게 자르고 있으리라 믿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누구나 탈선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젊은 날의 비행이나 탈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다. 자녀에게 관심을 가진 부모라면 이런 시점에서 자녀들의 의식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더욱이 요즘처럼 퇴폐·폭력·음란비디오 등 각종 유혹에 직접 노출돼 있는 청소년은 이전 시대에 비해 그 유혹을 견디다가 더욱 어렵다. 이는 법제도의 미비와 건전 오락물의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미성년자들이 보아서는 안될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사회, 가정의 책임이다. 따라서 통신망을 통한 영상물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신종 영상물의 유통금지등 법적장치와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스포츠·영화 등을 이용한 건전한 영상물의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 청소년 문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선도의 의지가 앞서야 한다.

범죄 부르는 환경 (갈례까지 간 청소년범죄 : 4)

중앙일보 94.09.24

◎폭력비디오 등 완전 노출/법적 규제없어 비디오방 우후죽순/심의도선정성비해 폭력성엔 관대

홍콩영화 『지존무상』에서 이름을 따오고 소설 『야인』에서 범죄단구성의 힌트를 얻고 미국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사람을 죽이는방법을 배운 뒤 한술더 떠종거를 남기지않기 위해 시체소각로까지 동원한 「지존파」 일당의 범죄수법을 보면 무심코 넘기는 주변환경이 바로 범죄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폭력비디오·만화·소설등 유해환경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다. 그 위험성과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음에도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는 추세다. 그중에도 문제가 큰 것은 비디오·전자오락 같은 전파매체다. 비디오는 정적인 만화나 소설과는 달리 배우의 우상화등으로 인해 타 매체보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직접적이고 크다.

비디오문화 전파의 첨병이 바로 비디오방. 문화체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91년 가을 처음 등장한 비디오방은 지난해말 2백67개에서 9월 현재 전국에 4백32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이들은 주로 대학주변에 많지만 대학가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놀이공간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디오방의 주고객이 청소년들인 셈이다. 이들 업소는 그 영업을 규제·감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내용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폭력·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 YMCA산하 「건전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 여름방학동안 서울시내 24개 초·중·고생 2천1백80명을 상대로 비디오시청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기비디오에 폭력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시된 어린이 만화비디오 4백13편의 73%인 3백3편이 폭력성 일본작품이었다. 학교주변 문방구나 서점에는 역시 폭력·변태의 일본만화들이 널려 있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간행된 무단복제 일본만화는 34개출판사의 3백여종, 4백만부정도이며 이중 70%가 폭력·음란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살인방정식』, 『연속살인사건』,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른 목없는 살인사건을 다룬 외국소설 『모례』 등 외국번역물, 지존파가 탑독한 『야인』, 『뺑끼통』 등 일부 국내 소설등도 청소년들에게 폭력성을 심어주는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 이승정(37·여) 실장은 「영화·비디오등 공연물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폭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폭력성에 대한 감각도는 마약과 비슷해 반복될수록 점점 자극이 강한 흥포한 내용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 많은 경우 폭력비디오나 만화는 그 내용이 선이 악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종식되어 있어 자칫 목적을 위해서는 악인을 죽여도 좋다는 식의 위험한 가치관이 어릴때부터 머리에 박힐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선·악의 판단기준이 뒤바뀌거나 자의적 일때 이들의 잘못된 잠재의식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자명하다. 지존파 일당은 『우리들의 가난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이기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은 모두 죽여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다. 서울대 손봉호(사회교육) 교수는 「폭력을 반복적으로 노출되다보면 폭력의 끔찍함이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서 폭력물에 대한 심의강화를 비롯해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환경정화가 범사회적으로 체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란물 대책 시급하다 (사설)

국민일보 94.12.22

가뜩이나 불량한 주변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공부방에까지 음란물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청소년 유해환경문제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관국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을 직접 상대해서 거래되는 CD음란물 까지 등장한 것은 컴퓨터의 대량보급이 빚어낸 청소년 정신건강유해사범이란 차원에서 특별한 경계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음란물의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CD음란물의 거래는 신종범죄란 점에 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 서울지검이 검거한 CD음란물 판매업자들의 수법은 컴퓨터를 매체로 했다는데 결맞게 가히 첨단적이다.

우선 이들은 심야시간대 (밤11시~새벽 3시)에 컴퓨터 통신망인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의 전자계시판을 통해 광고한다. 광고도 10분 안팎으로 짧은 시간만 내보내고 이용자번호도 수시로 바꾸는등 「반짝광고」로 청소년들을 유혹한다. 이같은 짧은 광고에도 보통 1백여건에 가까운 상담이 접수되며 업자들은 음란물의 제목과 내용이 들어있는 안내문을 고객의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문을 받는다. 고객이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자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물건을 전네주거나 뼈베등을 이용함으로써 비밀유지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선전에서 거래, 물품인도에 이르기까지 007수법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의 수법이 아니라 음란물인 CD 1장의 파급여파에 있다.

CD 1개에는 통상의 디스크 4백~5백장의 분량에 해당하는 1천여장의 음화와 1시간짜리 음란비디오 4~5개 정도가 수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니 우선 엄청난 분량에 대해 놀라울 뿐이다. 게다가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정지화면을 복사하거나 그 내용을 자유로이 합성해서 새로운 화면을 조작할 수 있기때문에 음란물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CD 음란물이 단순한 음란물보다 유해성이 더 큰 것은 이런 컴퓨터의 기능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컴퓨터에 깊은 지식이 없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기방에 앉아 컴퓨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대견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음란CD와 접촉하는 것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의 중·고교생 가운데 60% 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각종 음란만화나 서적등은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이제는 음란물의 PC 통신판매가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을 이같은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길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길 뿐이다.

<해외전문가 칼럼>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언론자유(2)

중앙일보 96. 2. 13

미국은 지금까지 AT&T와 같은 단일 기업의 전횡을 막고자 각종 규제를 써 연간 7조달러의 통신시장에 경쟁을 유지하려니 이제와선 야수 같이 강해진 통신업체들의 고삐를 풀어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것 같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선 당연한 이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네트로 견전하지 못한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보내면 차별하는 조항과 영화에 음란·난폭 정도를 전자식으로 삽입해 이를 TV가 자동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첨의 의무조항을 압도적 다수로 24시간 내 의결한 것은 역사상 보기 드문 속결이요 단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시하는 음란의 기준이 모호해 민권수 호연맹(ACLU)등이 법안 발효와 동시에 제소하는 사태를 빚었다. 아메리카 온라인과 컴퓨터서보 등의 PC통신업체들도 음란성의 기준으로 여러가지 봉변을 당한 바 있고 타임워너와 같은 대규모 출판사도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음란성을 막자는 데는 동감하지만 음란성을 차별할 수 있는 기준의 법규는 놀리면서 이런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원의장 뉴토 김그리치도 『성인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숙제인데 현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해손해 해결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말한다.

“영화처럼 살고 싶다” 20대가 25차례 강도·성추행

중앙일보 96. 5. 13.

『한편의 영화처럼 살고 싶다. 피할 수 없는 끝으로 나를 물아붙이고 싶다. 살인방법은 이것뿐인데….』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비디오의 범죄를 흉내내 범죄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며 20여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추행한 혐의로 임상국(림상국·24)씨를 구속했다.

성인이 비디오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림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한건을 마치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일기장에 자세히 기록해놓고 다음에는 살인을 저지를 것을 예고하기까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림씨는 지난 4월 21일 낮 서울동대문구 회기동 커피숍에서 혼자 있던 종업원 L모(24)양을 흥기로 위협, 성추행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는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현금 1백40여만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다.

림씨는 지난달 중순 비디오방에서 미국영화 『칼리포니아』를 본뒤 범행을 시작했다. 주인공 얼리가 이유없는 살인행각을 벌이다.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림씨는 『얼리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림씨는 이밖에 『올리버 스톤의 퀄리』 『비상구는 없다』 『어쌔신』 등 폭력과 허무를 다른 영화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쇄범죄 후 바다에 투신자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림씨는 4월 19일부터 주로 대학가 주

번 커피숍과 비디오방 등을 돌며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다.

림씨는 92년2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갔다 적응하지 못해 93년9월 혼자 귀국한 뒤 뚜렷한 직업없이 생활해왔다.

경찰에서 림씨는 『삶에 희망이 없다.내 스스로 이땅에 살 수 없도록 만든 후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려대 심리학과 안창일(안창일)교수는 『가정과 사회 모두에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디오나 영화속의 삶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이에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특히 폭력적인 내용을 쉽게 모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의 상품화... "젖소부인 신드롬" (1)

중앙일보 96. 4. 8

『젖소부인 바람났네』 신드롬이 최근 성인 애로 비디오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를 두고 마땅한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성인 애로문화 창출의 자연스런 사회현상」이란 주장과 「성의 상품화를 노린 장삿속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출시된 『젖소부인 바람났네』는 7천개 이상 팔리면 성공이라는 국산 비디오시장에서 무려 1만5천개가 넘게 팔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은 제작사 한시네마타운은 이미 시리즈 4탄까지 제작한데 이어 최근엔 고전극 「젖소부인」을 출시하는 한편 오는 6월 극장 개봉을 목표로 동명의 영화도 제작하는 등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성인영화를 주로 만들어 온 유호프로덕션도 최근 해외에서 외국배우들을 동원해 찍은 『성애의 여행』 시리즈를 내놓고 있고, 대우 계열사인 시네마트도 기존의 2~3배가 넘는 제작비를 투입해 「품질 고급화」를 선언하며 『삐삐러브』, 『샤넬 5』 등을 제작, 애로 비디오 붐에 일조하고 있다. 『젖소부인…』의 히트는 『풀소부인 바람났네』, 『파배기부인 몸풀렸네』, 『만두부인 속터졌네』, 『바람난 여자 난리났네』 등 「××부인 ××했네」식의 유사제목 비디오들을 쏟아내는 기폭제가 됐다.

특히 『만두부인…』는 「라면부인 살불었네」, 「자라부인 뒤집혔네」, 「김밥부인 옆구리터겼네」 등과 함께 PC통신등에서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실제 비디오로 제작된 것이다.

『젖소부인 바람났네』라는 제목은 한시네마타운이 소설 「자유부인」에서 한트를 얻어 만든 것을 방송 코미디에서 한 코미디언이 사용하면서 본격 회자되기 시작한 것. 국산 애로 비디오 열기에 편승해 홍콩의 성애물과 성교육을 내세운 비디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영화 관계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전국 영화관에서 7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홍콩의 코믹 애로물 『옥보단』은 지난 1월말 비디오로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대여순위 10위안에 들고 있다. 이에따라 홍콩의 B급 성인영화도 속속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다. 극영화는 아니지만 지난해 여름이후 부부 성교육 비디오 「부부생활 리서치」가 인기를 끌자 「101가지 러브 센스」, 「한방 부부클리닉」, 「이윤수박사의 성이야기」, 「닥터

마이클 폐리의 최신성가이드』 등 유사품 출시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자연 성인 예로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저질 성인영화도 수입 일례로 한국대학신문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덕성·동덕·성신·숙명·이화여대(가나다순) 앞 비디오방 12곳을 대상으로 여대생들이 자주 빌려 보는 비디오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중 총 2백 60편의 비디오를 1천 34회에 걸쳐 관람했으며 상위 10위 중 『리허설』(1위), 『옥보단』(2위), 『쇼걸』(3위), 『젖소부인 바람났네』 시리즈(7위) 등 예로물이 전체의 20.5%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시네마타운의 대표 한지일씨는 「35mm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김인수감독을 초빙해 작품성과 영상의 차별화를 내세운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 같다.」며 「성인들을 위한 시장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불거리로 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YMCA의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건비연)은 「산업 발전의 논리에 가려 성의 상품화와 왜곡화가 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런식의 말초적 흥미만 유발하는 제목은 여성을 물건으로 여기게 하는 풍조를 넣고 제대로 된 영상문화가 자리잡는 것을 가로막는등 폐해가 심하다고 말한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층에 미치는 악영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지적이다.

*** 청소년에 악영향 우려 현재 성인용 비디오는 적색표시가 돼 있어 이를 청소년들에게 판매·대여·시청케한 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게 돼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성인비디오 도난사고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대여점 주인들의 말이다.

서울신림동 한 대여점 주인은 「작설적 러브 신이 화제가 됐던 「너에게 나를 보낸다.」가 들여놓기만 하면 없어져 결국 3개를 다시 사야했는데 중고 비디오 시장에 갔더니 성인 예로물을 팔려고 들고나온 청소년들이 적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성인 비디오를 열기에 대해 「제목들이 요란해서 그렇지 성인물 제작 자체가 들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달 16일 ▶ 저속하고 퇴폐적인 제명▶ 작품내용과 상관없는 제명▶ 특정계층만 알수 있는 품위없는 제명 등 제목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작사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륜축은 또 「호스티스 시리즈·애마 시리즈·정사 시리즈·자존 시리즈등과 같이 몇개월 지나면 수그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젖소부인」으로 출발된 이러한 공방은 건전한 사회 소비문화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비디오 방영 교사 해임

중앙일보 95. 12. 23

(부산=정용백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성인용 포르노비디오를 교내 방송실에서 복사하다 기기조작 잘못으로 교실에 방영, 물의 를 빚은 부산 재송여중 이모(28, 여, 생물)교사를 해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사설이 드러날 경

우 함께 문책기로 했다.

어린이 10명중 6명 이상 성인용비디오 시청 중앙일보 95. 5. 6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TV를 통해 폭력장면을 자주 보고있으며 성인용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린이보호회 대전지부가 지난달 대전지역 국민학생 8백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학생 TV, 비디오 시청실태 조사" 결과 "TV에서 폭력장면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3.4%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0%는 폭력장면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다"고 응답해 폭력장면이 어린이 폭력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2%의 어린이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답해 폭력장면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계속 생각난다(30%), 무섭다(20.4%), 후련하다(5.9%) 등으로 답했다.

"성인용비디오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64.8%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용 비디오를 보는 장소로는 집(63.7%), 친구집(15.7%), 비디오방(12.8%), 만화가게(1.4%)이었다. 비디오를 보았을 때 느낌으로 후회했다(44.4%), 재미 있었다(24.7%), 혐오감을 느꼈다(19.7%)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폭력을 등 성인용 TV프로그램과 비디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가정과 학교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김방현기자】

12. 컴퓨터·통신물

인터넷에 최근 담배자판기 속속 등장

중앙일보 96. 1. 30

"인터넷에 접속하면 개인용 컴퓨터(PC)는 담배자판기가 된다" 최근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WWW)엔 가상의 담배자판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담배소매업자들이 인터넷을 새로운 판매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WWW사이트에 사이버 스모크, 스모코와 같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담배나 외국담배를 전시해 놓고 손님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판매방식의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자판기와 우편을 통한 담배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셈이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담배광고시 보건장관의 경고문을 신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담배제조회사에만 적용될 뿐 담배소매업자들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이버 스포크의 웹 사이트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합니다"는 문구가 작게 들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선에 머물고 있다. 형식적이란 지적은 담배구입 과정에는 나이를 물어보는 절차가 아예 없거나와 있더라도 거짓으로 18세 이상으로 입력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용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미국 대학생중 94%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며 이들중 11%는 고등학교 때 발급받았다. 또 다른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자중 18세미만 미성년자가 6%에 이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캠페인에 나섰던 웰립 모리스사는 담배소매상들의 새로운 상술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언론교육센터 캐더린 몽고메리 소장도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에 대해 "완전히 무질서한 뉴미디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담배연구소의 브레년 도슨 대변인은 "인터넷에 산업정책이란 없다"고 항변했다.

13. 방송물

청소년 절반이상 “모방범죄 충동” (탈선 부추기는 TV프로그램 : 1)

국민일보 95.09.18

◎선정… 지질… 폭력 판치는 TV·PC·만화/64% “실행위해 일거수일투족 관찰8” 충격/해괴한 몸짓·괴성 어른들이 보기로 민망청소년의 정서를 좀먹는 유해환경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TV로 인한 「공해」는 매체특성상 해악이 보통 심각하지 않다. 특히 리모콘만 누르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저질 쇼프로와 코미디프로는 청소년들의 전유물처럼 자리잡고 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선의 짹을 키우고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취침시간을 뺀 일과의 약 3분의 1인 하루 5~6시간 (여가시간의 70%) 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다. 이를 연간 일수로 환산하면 약 38일. 한달이 쥐친 넘는다.

사법연수원의 강지원부장검사는 최근 범죄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1백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놨다. 즉, 45.2%가 TV의 폭력장면에 대한 모방가능성을 생각해 봤으며 63.7%가 모방충동을 느꼈다. 모방을 위해 자세히 관찰까지

했다는 응답자는 64.4%에 달했다. 모 교화시설 수용청소년 3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T V에서 본대로 범죄를 실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5명)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최모군(14)은 MBC - T V의 「경찰청 사람들」에서 범인 2명이 여자 핸드백을 나눠채 달아나는 장면을 보고 두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모방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T V등 영상매체의 역기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청…」류의 기획성 프로그램은 그래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요란을 떠는 각종 쇼와 코미디프로들은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저속한 대중문화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을 겨냥해 제작된 가요프로그램들은 혼란한 조명과 아릇한 괴성 등이 어우러진 자극일변도로 흘러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모방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BS - 2 T V 「가요톱10」, MBC - T V 「인기가요 베스트50」, SBS - T V 「생방송 T V가요20」 등은 중고생등 청소년 이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들 프로그램은 그러나 출연가수나 그룹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춤동작 등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국민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주선숙씨(40·서울 아현동)는 『아이들과 함께 T V 보기가 겁이 난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코미디 등 오락프로도 마찬가지. KBS - 1 T V 「코미디1번지」, MBC - T V 「오늘은 좋은날」, SBS - T V 「코미디천왕대」 「웃으며 삽시다」 등 코미디물들은 대부분 말장난식 잡담과 해괴한 몸짓, 깜짝쇼식 프로진행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 또 KBS - 2 T V 「젊은이의 양자」와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SBS의 「깜짝 월드쇼」 등 오락프로들은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을 잇달아 방영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무분별하게 방영되는 각종 외화들도 문제다. KBS - 2 T V는 지난달 청소년 시청시간대인 오후 5~6시 사이에 성인용 외화인 「X파일」 예고방송을 통해 속옷차림의 여자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장면, 권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 등을 내보내 역시 방송위의 주의를 받았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린이 만화영화도 예외가 아니다. 곁으로는 모험심 배양, 환경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물신승배 스포츠영웅주의 문화사대주의 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방송국의 오락프로들은 거의 예외없이 외국프로 모방, 유사프로 남발, 박수부대 동원과 억지연출 등 과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린다. 이모군(15·서울 압구정동)은 『신세대가수 김건모와 그룹 노이즈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빼지 않고 본다』며 『재미로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소녀가장 김모양(17·서울 염곡동)은 『청소년프로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끌벅적한 프로대신 차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폐세계 등 미화 심해… 청소년 모방심리 자극 우려

학원폭력이 심상치 않다. 이제 학생들이 동료학생들의 구타와 금품갈취가 무서워 학교에 가기 싫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어 학원폭력의 폐해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학원폭력이 중고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학교에까지 번지고 있으며, 남학교 뿐만 아니라 여학교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조직들이 성인폭력조직을 모방하고 있으며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마피아를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판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가정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혹은 나쁜 친구들의 영향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의 방송매체도 학생들에게 폭력과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SB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방영되었던 「모래 시계」를 시청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드라마에서 묘사된 강폐들의 세계나 극중인물인 「태수」를 멋있다거나 남자답다라고 반응했었던 사실은 방송이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법과 정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힘센 자만이 득세하는 암울했던 80년대의 사회분위기 속에 살아오면서 어느새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왔고 폭력의 폐해에 대해 무감각해졌던 것은 아닌지, 그러한 무감각이 어느새 학원폭력의 토양으로 자리잡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모두 반성해 볼 일이다. 드라마에 삽입되는 폭력장면, 강폐들 세계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 폭력들이 삽입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영시간대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주말이나 저녁시간의 주시청 시간대에는 직·간접적으로 폭력이나 성이 묘사된 프로그램의 방영을 제한하고 10시 이후의 시간대로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다. 대신 요즘 시청률이 높아지는 10시 시간대 KBS의 「행복이 가득한 집」 같은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주시간대로 옮겨보자는 것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의 「체험 삶의 현장」과같은 프로그램 역시 오락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케이블 TV에서 영화방영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이나 잔인한 장면이 삽입된 프로그램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살 이하의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합지 않은 장면이 있다는 자막을 확실히 내보내는 일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막이 방송사측에서 볼 때 시청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방송 3사가 동시에 같은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의식을 마비시키게하는 유해환경으로 불전전한 컴퓨터게임을 들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적당한 놀이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

에서 초 - 중등학생들의 주요한 놀이도구로 컴퓨터게임이 부상한지 이미 오래다. 가정 - 거리 - 게임룸등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컴퓨터게임의 주요 내용은 극렬한 결투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놀이문화가 어찌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학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차제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정서를 때마르게 만드는 컴퓨터게임등 신세대의 오락매체 내용도 주의깊은 분석이 필요한 때다.

TV상품광고／“청소년들 정서에 유해”／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조사 세계일보 94.02.06

◎파다노출 등 지나치게 선정 - 폭력적／유해방송 횟수 오후 7 ~ 8 시간대에 가장 많아／언어습관에도 나쁜영향… 심의기준 강화해야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TV 방송광고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선정 - 폭력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학회부설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소장 최충옥) 는 지난 12월 8 ~ 14일 오후 5시 30분 ~ 9 시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V 3사 방송광고를 모니터조사한 결과 전체광고 5 백23건 중 22.9%인 1 백20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며 그 내용은 성차별 (44회) 선정성 (21회) 광고언어 (21회) 외래선호 (10회) 폭력성 (8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7 ~ 8 시 38회 (32%) , 6 ~ 7 시가 34회 (28%), 8 ~ 9 시가 30회 (25%) , 5 시30분 ~ 6 시가 18회 (15%) 으로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25회 (21%) , 일요일 21회 (17%) , 목요일 18회 (15%) , 수요일 17회, 월요일 15회, 화요일 14회, 토요일 10회 순을 보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오후 7 ~ 8 시대와 금 - 일요일 순으로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매일 보는 TV광고에서 제품의 내용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영상이나 문구가 빈번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적잖아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고언어중 상당수가 모방성이 빠른 청소년들에게 우리말 사용과 언어 창의력을 저해하며 외국어나 외국어 어투를 남용, 외래선호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컬러렌즈를 착용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으로 시작되는 모회사 컬러렌즈 광고는 지나친 동작과 표현을 보이고 있어 상품광고보다는 선정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개그맨 서경석과 이윤석이 출연해 코미디프로에서의 어투와 듣짓을 광고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H 야쿠르트의 「깨봉」, Y전자 「앗싸신 바람 7000」, C무약 「쌍감탕」, L사 「별난바」, H사 「콤비형무 선전화기」 광고 등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기고 있고 L제과 「가리비」도 MC 김승연이 코미디프로에서 사용하는 빈정거리는 말투를 여과없이 사용해 청소년들의 언어습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충옥교수 (경기대) 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TV매체에서 감각적이고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광고를 양산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로 심의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성인용 만화영화 무차별 방영-서울YMCA 조사 중앙일보 95. 4. 12

해외 성인용만화영화가 TV 브라운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무차별로 방영되고 있다. 서울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두달간 3개 방송사 4개 채널의 어린이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중 70-80%가 만화영화로 채워지고 있고, 그 대부분이 미국, 일본등에서 만들어진 수입물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c 와 SBS 두 방송의 경우는 자체제작없이 1백% 미국.일본만화를 수입해다가 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전체방송에 적용되는 외화허용비율(1백분의 5-1백분의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각 방송사는 무작정 의존하고 있는 외국수입만화중에서도 폭력물이나 선정성이 강해 어린이에게는 적합치않은 성인대상 만화영화를 버젓이 어린이 프로로 둔갑시켜 그대로 방영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송사들은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해 내보내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컨데 "지난해 폭력과 선정성이 심하다는 비난을 받은후 종영됐다가 최근 슬그머니 다시 선보인 "베트맨"은 대표적인 케이스 .폭력과 묘한 선정성이 섞인 성인애로 일색이란 지적이다."베트맨"의 "두고양이와 붉은 발톱편"(93년 11월 3일 방영)은 어른이 봐도 낯뜨거운 장면이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자의 몸매나 가슴을 집중 클로즈업 (베트맨 어린요정편) *폭력미화(슈퍼그랑조)*여자만 보면 사죽을 뜯거나 수영복입은 여자공상하면서 행복해하는 장면(울트라 탐험대)등 당연히 삭제되었어야할 장면이 여과없이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방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취학 아동, 폭력물에 지나친 접근 중앙일보 95. 4. 3

어린이들의 TV폭력소재로 시청이 위협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작두처형등 극중 무술, 살상장면이 빈번한 무협물 "관관 포청천" "칠협오의"등과 범행, 범인검거과정의 폭력장면이 빈번한 "경찰청사람들"의 4-9세 시청율이 최상위권을 기록한 때문. 전문가들은 부모와 학교과정의 자녀 시청교육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3일 시청률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서비스코리어(MSK)에 따르면 최근 20일간(3월6일-26일)의 연령대별 시청률조사결과 "관관 포청천" (KBS2)의 4-9세 시청율(남아기준)이 19.9%를 기록, 50대 이상(22.9%)에 이어 2위를 나타냈다.

"경찰청 사람들" (MBC)의 경우는 4-9세 시청율이 무려 30.7%를 나타내며 전 연령대별 시청율 1위를 기록중인 상황. 최근 "판관포청천"의 맞대응프로로 SBS가 편성한 무협을 "칠협오의" 또한 4-9세 시청률 10.5%를 기록하며 계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무협들은 아니나 상류층 행태를 소재로 한 "호텔"과 연예계 내막을 파헤치는 "갈채"(KBS2) 또한 21.4, 17.5%의 4-9세 시청율이 전 연령대별 2위를 기록, 성인프로에 대한 어린이들의 무차별시청 양상을 반증하고 있다.

"판관 포청천" "경찰청 사람들" "칠협오의" 등은 내용상 "권선징악을 위한 폭력"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4-9세 아동의 경우 수단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이해보다 단순한 폭력장면에의 흥미가 시청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 교육개발원의 나정박사(유아교육부장)는 "옳은 일을 위한 수단으로 보다는 어린이들의 공격성을 높이고 모든 것을 단순한 이분구도로 해석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개발원의 조향제박사는 "이같은 권선징악프로는 이해가 쉽고 전개가 빨라 아동들을 유인하나 장기적으로 폭력성과 단순사고 의우려가 있다"는 분석. 특히 나, 조박사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장 큰 책임은 이들의 무차별 TV시청을 방관하는 부모"라고 강조하며 "아동의 TV시청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유치원부터의 미디어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14. 만화·잡지

"청소년유해" 성인오락잡지／단속 - 홍보 크게 미흡
세계일보 93.10.29

◎ 청소년학회 29종대상 모니터조사／성인오락지 31% - 누드집 14% "정서해쳐" 선정적인 성인오락잡지 등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학회부설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소장 최충옥)가 최근 여성지 10월호 16종과 성인오락지 8종 10권, 누드집 5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오락잡지에 관한 모니터조사 결과 성인오락지 30.8%, 누드집의 경우 14.1%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의 설정기준(노출정도와 포즈형태)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분석된 인쇄매체는 성인오락지의 경우 결(11월호) 15면, 결(10월호) 18면, 비너스(11월호) 23면, 비너스(10월호) 13면, 사건 클로즈업 10면, 사랑만들기 15면, 사건실화 4면, 헬스 17면, 스페셜 7면, 엑설런트 10면으로 1백32면 (30.8%)인 반면, 누드집은 마이결 18면, 록 10면, 에로스 30면, 샤론스톤 4면, 유연실 12면 등으로 74면 (14.1%)이었다.

또 쉬즈 차밍우먼 영래이다 등 여성지는 52.4%가 화보인 반면, 성인오락지는 78.6%가 기사였으며, 여성지는 화보의 98.5%가 광고지만 성인오락지에는 광고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오락지의 경우 화보의 69.4%가 누드에서 대조를 보였다.

누드면은 쉬즈 70면과 영레이디 4면으로 조사대상 여성지 전체지면 9천8백3면의 0.1%인 반면, 성인오락지는 걸 17면, 스페셜 14면 등 93면으로 성인오락지 전체지면 8백83면의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다 「기사+누드」면 (228면) 까지 합하면 성인오락지는 36.3%에 이른다. 성인오락지와 여성지의 제목을 분석한 결과는 여성지가 건강 (14.9%), 생활정보 (14.8%), 패션 (14.7%), 연예정보 (13.88%) 등 다양성을 토이는 반면, 성인오락지의 경우는 성관련기사 (25.3%), 운세 - 만화 - 상담등 고정연재물 (19. %), 고발기사 (17.0%)연예 (12.7%)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만화 '출판공해' 심각

국민일보, 1991. 3. 4

출판계약서를 첨부해 심의를 요청해온 만화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 유통을 보장해 주는 대신 불법복제방식을 이용한 불량만화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거쳐 근절시킨다는 복안이.....

간행물윤리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87년부터 90년10월까지 34개출판사에서 아동용 21종, 성인용 1백79종등 모두 2백종의 일본만화를 발행했으며 이 가운데 출판계약절차를 밟은 책은 4종뿐이고 나머지 1백96종은 복제만화로 밝혀졌다.(해적판중 아동용은 21종뿐)

성인용 만화의 경우도 1백79종 거의가 폭력·무협·스포츠장면을 통해 살인청부업자, 살상면허를 가진 수사관, 퇴폐적 애정해악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역사만화는 사무라이나 넉자(忍者)등이 벌이는 권모술수나 폭력·살상장면을, 무협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대사와 그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애정만화도 동성애, 변태성행위, 노골적 정사장면등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만화의 번역출판이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화가 열악한 환경으로 위축돼 있는 반면 같은 동양권으로서의 생활습성과 언어전달체계의 유사성으로 이해도가 높으며 만화구성과 기법등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보다 성개방도가 높은 일본만화가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업적 측면과 함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한국독자를 노리는 일본의 만화업계가 윤리위의 심의결정과 때를 같이해 저렴한 저작권료로 국내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경우 국내만화시장을 석권하는 일은 시간문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화를 이용한 문화예속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나 미풍양속, 정식문화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철저히 예파해야 하며 한국만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화가 협회의 예총가입, 만화상제정, 만화연구소설립등 항구적인 만화문화육성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만화 국내출판 심각하다.

스포츠조선, 1991. 3. 7

해적판중 아동용은 21종, 나머지는 모두 불량 저질 성인만화였다.

이러한 일본만화 복제판은 앞으로도 증가를 보일 추세인데 그 이유는 현재 일본의 소설 등 모든 도서가 한국 설정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번역 출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화도 도서에 포함되므로 이의 번역 출판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료를 지불하는 국내작가 만화를 출판하는 것보다 인세단 지불해도 되는 일본만화의 출판이 훨씬 싸게 먹힌다.

일본의 만화업계는 썬 저작권료로도 국내 출판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는 얘기

“만화는 어떤 내용을 다루든 이념이 담겨 있어 자칫 만화발행국의 문화적 대외증속으로 흐르기 싶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컨대 월트 디즈니의 천진무구한 미키마우스나 도널드덕에도 미국식 사고와 이념이 깔리게 마련, 즉 미국사상이 ‘재미’로 포장돼 있다는 것이다.

2차대전 직후 미국만화는 당시 취약했던 유럽만화 시장에 대거 침투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사로잡아 사회문제화되자 유럽 각국은 곧 자국의 문화보호적 차원에서 강력 규제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적판 日만화 “우후죽순”

중앙일보, 1991. 4. 13

「만화내용중 반 이상이 성적 묘사를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주로 연예·방황·폭력·야성·초능력등이다」 이는 日本東京부 생활문화국이 自國의 만화실태를 조사·분석한뒤 지난해 8월 발표한 것으로 日本만화가 본국에서조차 큰 사회적 문제로.....

일본만화의 표절·복사시비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87년께다.

당시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 일부 출판사들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일본의 성인만화를 아무 련 여과없이 지하출판해 모방범죄 유발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했으나 판매에 호조를 보이자 많은 출판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해적출판을 해온 것이다.

지난해 10월까지 34개 출판사에서 2백여종의 만화를 출판했던 것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집계됐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2백여종의 일본만화중 21종만이 아동용이고 나머지 1백97종은 불량·저질의 성인만화인 점과 이들 만화들이 전국 7천여 대본소(만화가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읽혀지는 점등에 있다.

일본만화특유의 선정성·폭력성·잔인성을 담고 있는 해적출판만화들은 국내의 가공작가 또는 편집부기획등의 이름으로 권당 5백원의 가격에 학교주변 문방구·책방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내만화가 숫자는 3백여명으로 이중 소위 인기작가는 10여명에 불과할뿐 아니라 그들의 작품 내용도 일본만화와 흡사한 것이 일본만화선호의 가장 큰 문제점

동심까지 파고든 「왜색저질문화」 업자들 무분별 복사 …… 40여종 시장석권

조선일보 1991. 5. 11

성과 폭력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넣었고 이것은 아동만화에까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일본의 발달된 소비문화와 결합, 더욱 자극적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전통과 산업화수준이 모두 다른 우리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87년 출판자유화 조치는 잠복해 있던 만화업자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저질음란만화가 호우처럼 쏟아져 나왔다. 89년 1월 검찰이 업자를 구속할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 호황 역시 1년 6개월만에 끝났다. 이 기간동안 1백70여종의 성인용 일본만화가 복사돼 나왔다고 한다.

「만화침략」 음모… 한심한 대응

조선일보 1991. 5. 11

우리가 아무리 공짜로 베푸려고 만화에 대해서는 별로 항의가 없었고, 오히려 우리나라 업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해적출판물을 권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선 업계의 경우 일부 만화업자는 일본만화를 들여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몇몇 업자들이 단체로 일본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문화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만화의 간행물윤리위 사전심의를 허용했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이조치는 그동안 유통은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던 일본 만화를 우리제도 속에 편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책변화의 중대성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역시 업계였다. 공식 수입을 위해 업자들이 폐지어 일본으로 몰려간 것도 이때였다.

「불량만화 추방운동」 전국확산

서울신문 1991. 10. 4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일본만화는 90여종. 이 가운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만화는 「베르사이유의 장미」 등 3종에 지나지 않는다.

日불량만화 추방운동 확산

출판학회 학술학회의 한-중-일동 주제발표

1991. 10. 19

---한국출판학회(회장 윤형두)주최 「국제출판 학술발표회」에서 일본측 발표자로 나선 일본출판윤리위원회 시미즈 히데오(清水英夫)회장은 「일본만화의 성과 폭력묘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해악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까지 「수출」되면서 국제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코믹잡지 유해도서의 청원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상하양원에 발송했고, 그 직후 자민당은 당내에 「어린이용 포로노 코믹등 대책의원 간담회」를 결성..... 동경도의원회는 7월 자민당으로부터 공산당에 이르는 전원일치로 출판업계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조례개정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불건전 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의」를 가결했다.

---김병집씨(지경사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는 국민학생과 성년기사이의 독서의 맥을 끊어 놓아 독서의 최대과제인 습관화를 경착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이 결국 지난해 총 도서발행부수증 참고서가 49.4%를 차지, 건설한 출판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약삭빠른 상흔에 사전심의제도 유명무실

불법·저질 일본만화, '주간지 둔감' 범람

일간스포츠 1992. 8. 22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일본만화의 유통을 막기위해 지난 3월부터 외국만화단행본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약삭빠른 교묘한 술수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 단행본으로는 해적판출판이 어렵게 되자 업자들이 사후심의단으로 발간이 가능한 주간지형태로 전환, 범망을 살짝 피하면서 저질만화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격주간지를 표방하여 만화대본소가 아닌 학교근처 서점과 문방구등지에서 팔리고 있다.

---이들 잡지들은 일본만화 단행본과 똑같은 내용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진채 출간되고 있다. 주간지 발행사들이 당초 공보처에 등록할 당시 '만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밝고 건전하는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사무라이식의 잔혹한 폭력과 선정적인 장면등 일본만화의 부정적 측면이 한국작가의 이름아래 그대로 실리고 있는 것.

심지어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조차 여론이 나빠 발간중지된 것도 있어 충격을 더해준다. 물론 이들잡지에 실리는 만화들은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한푼 지급하지 않는 해적판이다.

---일본만화잡지들의 원작출판사들을 통해 구체적인 표절내용을 확인한 권영섭 한국만화

가협회회장은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권익과 우리만화 살리기 차원에서 이들 잡지들은 마땅히 폐간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원작자들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권 위임문제도 원칙적 합의를 본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중학생 88% “외설만화 본다”

서울신문 1992. 11. 10

---성인용 저질·외설 주간만화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교생의 대다수가 매주 1권 이상의 성인만화를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만화가 청소년층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은 시내서점과 학교주변·신문가판대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1천5백~2천원수준이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만화에는 「청소년들에게 대여·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표지에 적혀 있지만 판매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저질주간만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성인용 주간만화의 무분별한 판매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물론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학생의 88%, 고등학생의 78%가 매주 1권의 주간만화를 구독한다고 응답해 성인만화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윤리개념에 맞는 주제를 개발하지 못한 만화가들의 책임도 크다

지하출판 국성..... “왜 방관하나”

국민일보 1992. 11. 19

---이들 만화는 청소년 한명이 구입했을 경우 거의 전학급생이 들려보거나 친구들이 함께 읽는 경우가 많아 그 악영향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만화는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선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남녀의 정상적 사랑은 진부한 것이고 인간은 오직 성적 쾌락을 위해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성을 이용하는게 정당하고 여성은 성욕충족을 위한 대상일뿐이며 각종 성폭력 행위와 변태성욕등도 나쁜게 아니라는 등의 가치관을 심을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용소장은 「정식 공인된 출판사에 의해 나오는 만화의 문제점도 크지만 불법 해적판이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다」며 「청소년들이 이런 만화를 본 후 충격을 받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관련된 상담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

---사법당국에 일부 드러나 판매업자들만 단속하지 말고 제작·보급업자들의 뿌리를 철저히 파헤쳐 의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념실대는 일본만화 연재까지 방치하나.

한겨례신문 1993. 5. 3

---독자대상 인기도 조사에서 최근 거푸 1위에 오른 만화들은 <드래곤 볼>을 연재하고 있는 <슬램 덩크>등 일본만화들, 판권계약을 맺고 싶은 잡지가 아니라도 일본만화는 학교 앞이나 동네 서점 어디서나 쉽게 구해볼 있다. ‘불법유통만화, 법제정 필요한가?’

---서울 YMCA조사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로 집계된 <슈퍼볼>도 간행물윤리위의 심의 필증을 흉내낸 ‘한국우량만화협의회’ 등 유령단체 실사필증을 써온 채 나돌고 있다.

---만화가 이희재씨는 “합법적인 만화라 하더라도 우리 작가의 만화의 정서와 화풍에 편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업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 폭력과 성표현이 그것”

---지난해 3월부터 <드래곤 볼>을 연재하고 있는 <아이큐 짐프>의 김문환 팀장은 68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일본만화 <손오공의 대모험>을 들여온 이후 <마린보이> <황금박쥐> <우주소년 아톰> <마징가 제트>등 일본만화영화가 텔레비전 만화영화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폭력 일본 번역만화 초-중>

---서울의 국민학교, 중학교 남학생 대부분(79.4%)이 매달 한권이상 만화를 읽고 있으며, 그 중 선정적 - 폭력적인 일본만화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손상익씨 (만화평론가)는 「한해 5백만권 정도의 불법 유통만화가 시중에 나돌고, 그중 대부분이 일본만화」라고 밝힌다.

---▲성인만화의 판매방법을 제한, 미성년자에 판매시 사법처리할 것 ▲불량 저질만화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사법감시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청소년 3분의1이 폭력·선정 성인만화 구독

중앙일보 95. 8. 17

서울의 청소년들 중 3분의 1가량이 폭력과 선정적인 장면묘사로 일관하고 있는 성인만화 잡지를 구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이상이 음란과 퇴폐를 조장하는 저질 일본번역 만화를 본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들이 유해만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최근 서울시내국민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년생 5백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인 만화잡지, 일본번역만화 구독실태조사”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만화를 본 사람은 1백85명(33.0%).중학생이 1백32명(23.6%)으로 국민학생(53명,9.4%)보다 두배이상 많았다.

또 남학생이 (1백12명,41.8%)이 여학생(73명,25.0%)보다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성인만화를 월 1-5권(63.8%)을 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11권이상 본다”는 학생도 2.7%나 달해 청소년들의 성인만화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친구 것을 빌려보거나(49.7%) *책 대여점(15.7%)을 통해 성인만화를 본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경우 서점에서 사보기도 해(5.4%) 작가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본번역만화의 경우 응답자의 94.1%인 5백27명이 본 적이 있다고 대답,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미있어서 본다”는 이들이 절대 다수(54.5%).

서울YWCA 환경특별위원회 강민아(28)간사는 “성인 만화잡지와 일본번역만화가 책 대여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대출되고는 등 무방비 상태”라고 말하고 특히 “일본번역만화는 대부 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인책 어린이에 “무방비”

중앙일보 95. 5. 25

주부 최모(37)씨는 얼마전 국교 5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과 열심히 읽고 있던 책을 살펴보고 가슴이 철렁내려 앉았다. 책에는 아이들이 보기에 지나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이야기는 '강남 모여고에서 있었던 일로 어느날 저녁 교실에 혼자 남아 자율학습 하던 한 여학생이 숙직교사인 김모선생이 추행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2년뒤 귀신이 되어 그 교사앞에 다시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는 내용이다. 도서출판 CSC에서 발행된 “특급공포체험 셋 1,2”가 문제의 서적이다. 특수안경을 사용, 책속의 그림이나 사진을 입체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책은 지난해 7월 발행된 1권이 10만여부 판매된 것을 비롯, 지난 3월에 나온 2권도 4만여부나 팔렸다.

특히 국민학생과 중학교 1,2학년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려 이책을 읽었다는 국교 6년 김모(13)군은 “책을 보고나면 무섭기도 하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책은 지난해 7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성인용으로 심의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데도 일반서점들에서는 다른 아동용 서적들과 나란히 진열돼 팔리고 있다.

서울도봉구 창동 모서점 주인 윤주현(49)씨는 “성인용이나 아동용이라고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아이들이 이책을 많이 찾아 아동용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서출판 CSC의 오주협사장은 “성인용으로 기획, 제작한 책이 서점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서점에 이책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15. 영 화

청소년 절반이상 “모방범죄 충동” (탈선 부추기는 TV프로그램 : 1)

국민일보 95.09.18

◎디즈니만화 까지／“외설에 노출된 양심”／「라이온킹」SEX문구 「인어공주」엔 묘한 그림／「알라딘」에선 「옷을 벗어요」 등 자극적 내용 전세계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월트디즈니의 만화영화들이 외설시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의 반낙태단체인 아메리칸 라이프리그 (AFL) 는 월트디즈니사의 만화영화 「라이온 킹」의 한 장면에서 「섹스」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면 제작사가 이 비디오들을 회수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의 「SEX」 단어는 주인공 심바가 친구인 품바 티몬과 함께 웃으면서 구름다리 절벽에서 땅에 떨어졌을 때 먼지가 일어났다 가라앉으면서 한 글자씩 차례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또 「인어공주」에서는 아가씨로 변장한 바다마녀가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 주례목사의 발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 이에 대해 월트디즈니사는 목사의 무릎을 잘못 본 것이라고 반박한다. 「알라딘」에서는 등장인물이 「10대들이여 옷을 벗어요」라고 외친다고 이 단체는 주장하나 각본에는 「호랑이야 가봐라」로 돼있다는 게 디즈니측의 설명. 오랫동안 만화영화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이 결코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는 생각에서 자신들의 작품에 야한 이미지나 장난기 있는 농담을 숨겨왔다. 이전에는 그것을 필름속에서 명확히 끄집어내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레이저디스크와 같은 새로운 비디오기술의 도입으로 한 컷 한컷 겹증이 가능해지고 있다.

16. 생활개혁

「생활개혁 10대 과제」 내용

한국일보 94.01.08

◎예식·장의요금 「바가지」 단속／민원 우려사업 사전 청문회

① 후진국형인재추방=철도 해운 유·도선 항공 지하철 가스 전기 석유화학 노후건축물 교량 지하공사 화재동 사고취약요인이 많은 12개 분야를 중점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주민신고제, 수시점검반 운영

② 4 대질서운동추진=오풀투기 차례 안지키기 음주소란 암표매매 (기초질서) 불법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가로질서) 무허가·심야·퇴폐영업(위탁질서) 불법·음란비디오 및 음반 저질출판물 (풍속질서) 등을 집중단속

- ③ 민생침해사범소탕=가정파괴범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을 중점적결, 우범지역의 순찰강화, 사행성오락실단속, 소년범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강화
- ④ 대중교통서비스개선=96년까지 베스전용차선제를 6 대도시 1 백34개구간 (5 백51) 으로 확대, 연 1 만1천명수준의 교통사고사망자수를 96년에는 8 천 6 백명수준으로 줄이기
- 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대형배수지증설, 부식성관 개량, 정수장시설내 24시간 중금속 자동감시장치증설, 녹물발생민원의 24시간내 처리, 97년까지 주요상수원을 1 ~ 2 급수로 개선, 8 개 다목적댐과 21개 광역상수도건설
- ⑥ 국민건강 위해 식품근절=식품위생기준 및 첨가물사용기준의 강화,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대상확대, 수산물의 항균성물질 잔류허용치신설, 녹색신고제도입
- ⑦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만화가게 오락실 비디오가게등 학교주변유해업소를 95년 말까지 이전·폐쇄, 「학교주변에서만은 마음놓을 수 있다」는 수준으로 개선
- ⑧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예식·장의요금 부동산증개료 이사운임료 유홍숙박업소 요금 도시가스공급시설비의 과다징수등을 집중단속, 시군구민원실에 신고센터운영
- ⑨ 집단이기주의극복=집단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은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공청회·청문제도등을 거친 뒤 사업계획을 결정,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및 사업시 주민 대표 참여의 제도화
- ⑩ 청결한 국토환경보전=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상용억제, 음식쓰레기줄이기, 콩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 수거료 종량제도입, 재활용 및 소각처리비중을 확대, 분리수거체계의 일원화

17. 의식개혁

청소년범죄/쾌락-충동범행… 「선진국형」 왜 간다
세계일보 93.05.04

대검 강력과장 김승년부장검사는 『한탕주의, 물질만능, 인명경시 풍조등 사회전체의 이완과 부패현상이 사회범죄의 온상이 된다』며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성호선임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중 음주 흡연등의 사소한 비행은 「문제화행동」, 폭행 절도처럼 중한 비행은 「범죄화행동」을 구분해 단계별로 대처해야만 청소년 범죄율을 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책으로 △자녀의 생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는 부모의 자세 △공부에 대해 과중한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교육제도 개선 △비행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오락실 등 유해환경 제거가 선결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인 후기범죄화에는 초·중학교 시기의 조기범죄화와는 달리 학교성적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

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서 인성발달 위주의 교육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18.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검토／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한겨레신문 95.10.03

행정쇄신위원회는 청소년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야간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도 자치단체와 보이스카우트연맹 등 청소년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야 폭력 및 성적 유혹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행 쇄위가 검토중인 이 방안에 따르면 △20살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금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 유흥가 등 유해환경업소 주변부터 실시하되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조치를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과 야간통행^④ 불가피한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통행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이 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설문 대상 기관에서는 80%가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계도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중심의 캠페인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할 것인지 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야간통금 찬반양론 팽팽

한겨레신문 95.10.23

◎교육행정가 필요성 인정·청소년전문가 부정적… 학부모 70~80% 찬성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실시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약물남용 등 청소년 비행이 위험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과, 선의의 피해자를 놓을 기본권 제한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논란의 발단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지난달 말 국민제안을 받아들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으면서 비롯했다. 행쇄위는 애초 통행금지의 나이·시간·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해 의견조회에 나섰다.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경찰청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전제로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고, 문화체육부는 현행법을 보완해 시행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개 시·도 중 관광지가 많은 제주와 강원을 뺀 13개 시·도가, 서울시내 25개 구

청 가운데 21개 구가 찬성쪽에 손을 들었다.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청년회 (YMCA) 전국연맹과 청소년연맹, 청소년개발원, 청소년학회 등 유관단체들은 자율권 제한을 이유로 반대 뜻을 보였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은 자치단체 조례로 일부 우범지역에만 통금을 실시하자는 수정안을 냈다.

관련 전문가의 경우 교육학자·교육행정가들은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인 반면 청소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편이다. 김길용 전 부산시 교육 위원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 학부모의 83%, 고교생 학부모의 73% 가 찬성했으나 법적강제 (20%) 보다는 캠페인 형태의 선도 (53%)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론자들은 퇴폐·향락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비행을 막는 데 현행 법령으로는 역부족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시간과 지역에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이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대론자들은 현행 법령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타율적 제재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편법과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개방화·자율화 시대를 거스르는 자유권 제한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통금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실시방안을 보면 모범에 시행근거를 두고 실시지역이나 시간은 시·도 조례나 지침으로 하자는 견해가 우세하다. 행체위 관계자는 “청소년 통금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일 뿐 정책방향을 정하고 여론을 듣고 가려는 게 아니다”라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 지역 순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찬성／탈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우리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범죄환경 속에서 헤매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강력사건 중 절반이 청소년 범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내 학부모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녀가 밤늦게 다니다가 중학생의 10.7%, 고등학생의 9.2%가 폭행, 금품갈취 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여학생도 5%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통금은 민생치안 차원보다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자정 넘어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대학가 주변이나 유동가에 가보면 정말 낯뜨겁고 민망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이들의 탈선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것이다.

야간 통금은 청소년들의 자유를 구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범죄환경과의 접촉을 끊고 건전한 청소년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혹시 밤늦게 일해야 할 청소년들이 있을 때는 학교장이나 감독기관의 협조를 발급하면 될 것이고, 부모나 어른과 동행할 경우도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위반자에게 무거운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이나 반성문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학교과 가정의 연계지도로 바른 생활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청소년 통금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이미 3분의 2 이상의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워싱턴주의 경우 올해부터 16살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중에는 자정, 그외는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통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대／정서 압박감 부정적 영향줄것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반대의 견을 제시한다. 우선 야간 통금은 범죄예방과 큰 상관이 없다. 야간통행이 청소년범죄의 원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다. 금품갈취, 폭행 등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한밤 이외의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 흔한 청소년 비행인 음주, 흡연, 약물남용, 음란비디오 시청 등도 심야 통행금지로 막을 수 없다.

둘째, 거의 대부분의 소년은 야간 통금이란 규제 없이도 한밤중에 나다니지 않는다. 심야에 통행하는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또는 독서실에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 잔업이나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 청소년 등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예외를 인정한다면 통행금지의 적용대상은 극히 일부의 청소년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통행금지를 당했을 때의 압박감과 그것이 해제되었을 때 얼마나 환호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금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게 될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통금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과장적이고 안일한 생각이다. 지금도 퇴폐·유해업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심야영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협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요는 새로운 입법보다 협행법의 집행을 철저히, 일관성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통행금지는 문민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는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보건복지부, 열린 교육사회를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부, 청소년 건전육성정책을 껴는 문화체육부,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도와도 어긋난다.

19. 유해환경 추방캠페인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대행진

경향신문 94.10.07

◎내일 대학로~탑골공원… 가장행렬 등 선봬

최근 패륜아적·비인간적인 각종 범죄와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정서에 해를 미치는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활동에 청소년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김집)는 8일 오후 2시 서울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종로 3가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다짐 대행진」을 갖는다.

이 대회는 한국결스카우트연맹·청소년적십자사·한국우주소년단·한국청소년연맹등 34개 회원단체 청소년 1천 5백명을 포함해 청소년지도자·교사·학부모 등 모두 2천 5백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고적대 연주와 인기연예인의 노래공연등 식전행사도 펼쳐지며 「우리의 다짐」 「청소년과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활동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행진하는 동안에는 참가자들이 모형장승·탈·종이옷·모자와 어깨띠·파켓·현수막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꾸짖는 재미있는 가장행렬도 선보인다. 또한 마무리행사로 탑골공원에서 흥사단 어머니풀물페공연과 그동안 수거했던 불량매체들을 폐기, 소각하는 시간도 갖는다.

20. 청소년 비행

청소년범죄／쾌락 - 충동범행… 「선진국형」 왜 간다

세계일보 93.05.04

◎충산충자녀 범죄율 18%… 매년증가／포악·집단·저연령화… 잠재적 비행요인도 심각／유해환경경화 - 부모관심 - 인성발달교육 결실

청소년범죄가 쾌락과 충동에 의한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범죄 변이유형」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손가정이나 빈곤층 출신 청소년범죄가 줄어드는데 비해 중류가정 자녀들의 범죄증가, 연소화 추세 등은 대표적 사례라는 것.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93년 3월말 집계)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율은 지난 75년엔

빈곤층가정 자녀가 92.5%나 됐고 중산층자녀는 7.1%인 4천 3백9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산층자녀의 범죄율이 88년에는 12.4%, 90년에는 16.7%, 92년 3월말 현재는 17.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93년말 집계는 18%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교육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졸 이하의 범죄구성비는 82년 19.2%나 되던 것이 91년에는 4.8%에 불과하고, 고졸이상은 40.2%에서 56.5%으로 높아졌다. 전파자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78년 전파가 없었던 초범은 79.2%를 보였으나 92년 3월말 현재는 73.2%으로 낮아졌다.

범죄 유형별 분포는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범, 절도 횡령 사기등 재난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 순인데 살인·강간은 감소하고 있으나 강도는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도 연소화하고 있다. 15세 이하의 범죄소년은 87년에 16.7%이던 것이 92년 3월말에는 18.5%로 1.8% 높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같은기간 2% 낮아졌다.

그러나 전체범죄에서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적어지고 있다. 87년 8.8%이던 청소년범죄율이 92년 3월말에는 6.5%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성인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원 정문성연구원(교육학)이 최근 조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유형을 보면 은둔적 비행(85.5%)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고, 다음이 폭력과 성적 비행(38.5%), 가출비행(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연구원은 「청소년비행이 양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발전하면서 질적으로 포악화 집단화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요인을 분석해 가정 학교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사단 청소년상담실 김영진실장도 「범죄를 저지로는 청소년보다는 잠재적 비행청소년이 적지 않는데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정책 차원의 비행교정과 예방프로그램 마련, 교사의 생활지도와 연수, 청소년 관련단체의 상담활동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잘사는 집 아이들의 범죄가 느는 등 청소년범죄가 서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가정과 학교교육의 강화, 범죄유형별 변이에 따른 사법기관의 적절한 계도기능이 조화될때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황종택기자>

□전문가 견해

◎가정 - 학교 - 사회, 제자리 찾아야／민준기 청소년개발연구원장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예의별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학교에서마저 호려전 스승의 상으로 인해 진실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비행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음은 어쩌면 필연적 인파인지도 모른다. 결국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남북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지체 예의 조화스런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소년 전용시설 확

총 등 공간개발과 함께 다양한 이론과 프로그램 등 인적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 사회 공동의 자녀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있음을 감안할때 가정과 학교교육의 강화, 범죄유형별 변이에 따른 사법기관의 적절한 계도기능이 조화될때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도덕 바로서야 비행 - 반항 막아／강지원 법무부관찰과장

도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유있는 반항」에 대해 어른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한다. 특히 그간의 현장경험으로 볼때 부모의 잘못이 비행청소년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이 먼저 부도덕한 생활태도를 고쳐 솔선수범해야 한다. 애정결핍 과잉보호 지나친기대 학대 등은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주요인이다. 아울러 학교주변 등 청소년을 오도하는 유해환경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진일보한 행정제도인 보호관찰제 등을 도입, 청소년 선도에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소년원의 학교교화에 따른 복학 전학 편입학의 협조와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 적극 추진돼야／이규미 청소년지도자육성회상담실장 우리사회의 청소년비행과 범죄화는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직시, 정부 정책과 각 단체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북돋우는 방향에서 마련돼야 한다. 놀이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는 청소년활동 기회와 장소, 지도자, 재정확보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 다행히 청소년문화를 종합육성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데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는 크다. 다만 1천4백만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성장하도록 안목이 넓고 개방적인 청소년들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어른들의 이해와 지도가 뒤따라야겠다.

중·고생들에 포커 유행..교실서도 카드노름

중앙일보 92. 05. 27

중·고교생 등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포커' 노름이 번지고 있다. 야영장, 당구장 등 교외뿐만 아니라 학교 셔틀룸, 심지어는 교실안에서 까지 '포커'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고 판돈 규모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금전만능주의 세태속에 비행 청소년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이

같은 노름 열풍은 최근 도박을 소재로 한 홍콩 영화들이 시중에 벌람하면서 확산되는 추세여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 장려 등지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성북구 장위동 A 당구당에서는 고교생 5명이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포커 노름에 열중하고 있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각기 다른 고교에 입학해 뿔뿔이 흩어지게되자 우의를 돈독히 한다며 지난 1년여 동안 방과후에 거의 매일 당구장에서 만나당구를 치거나 포커 놀이를 해오고 있다. 이들의 노름 판돈은 보통 3~5만원 수준이나 때때로 당구장에서 사귄 다른 학생들이

질 경우 수십만원까지 판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서울 J고 2년 이모군(17)은 "친구들 사이에서 포커를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할정도여서 어쩔수 없이 포커를 배웠다"면서 "시험이 끝났을때나 휴일에는 친구 집이나 학교 서클룸에 모여 포커판을 벌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D 중학 2학년생 한모군(14)의 아버지(51.회사원.서울 서초구 역삼동)는 최근 아들의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이상해 몰래 가방을 열어 보았다가 카드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한씨는 아들을 추궁한 끝에 한군이 지난 3월 봉사활동을 표방한 교내 서클에 가입한 후 학교 운동장에서 야영 훈련을 가졌는데 이때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텐트안에서 밤새도록 포커를 한 사실을 알아냈다.

일부 중.고교생들 사이에는 실제로 근교 산으로 야영 훈련을 할 때 지도 교사가 잡든 틈을 타 술을 마시고 포커판을 벌이는 것이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상습적으로 포커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 포커 바람이 불면서 학교 주변 문구점들도 카드를 갖춰놓고 판매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미아동 S 고교 앞 문구점의 경우 1백원짜리 미니카드에서 1만원 짜리 고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팔고 있는데 주인 김모씨(45.여)는 "최근 들어 카드를 사려는 학생들이 거의 매일 찾아오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심심풀이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도박판까지 벌이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전 YMCA 총무 전택부씨(77)는 "최근 노름꾼을 미화한 홍콩영화가 범람하면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포커 노름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고 학생지도주임 전우환교사(52)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커에 몰입하는 것은 어른들의 도박 열병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행심에 젖지 않게 학부모나 교사들이 자녀와 학생들의 불만과 욕구를 해소시켜 주도록 자주 대화를 갖는 등 기성세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1. 성 문 제

한국판 '유소녀' (신10대 : 7)

중앙일보 96.05.05

◎윤리 뒤엎는 '즐기는 성' 추구/감추기 보다 욕구발산에 더 익숙/음란물 엿보기 어른들 통제밖에 사이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현실과 가상현실의 동시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신10대들에게 성 또한 이전의 그 또래와는 다른문화의 세계다.

도시화·서구화의 영향아래 확산되어온 「개방」과 「향락」의 연장선에서 사이버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문화로 옮겨가는 추세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기성윤리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9일 취재팀은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했다. 여행사 직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의 제보로 이른바 「유소녀」, 여고생 매춘현장을 목격했다. 이웃 일본에서는 70대에 이미 문제가 된 현상이지만 국내에서의 처음 목격은 기자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 전철역 인근 K편의점 앞에 3명의 여성이나타났다. 어색한 화장으로 「위장」 했지만 옛된 외모를 감추지 못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주위를 살피며 편의점 주변을 서성거렸다. 잠시후 승용차 두대가 다가왔다. 차안에 탄 회사원 풍 30대 남성들과 몇마디 주고받고선 이들은 차에 뒀다. 차는 코앞의 여관촌으로 사라졌다. 추적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서울시내 여고 3년 재학생이었고 무선호출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정모(18)·김모(17)·유모(18)양.

『지난해 초여름께 친구가 「한건 하자」기에 시작했는데 그뒤로 계속하고 있어요. 뭐 어때요. 돈도 벌고 재밌잖아요.』 리더격인 정양은 지난해 6월 고교에 진학하지 못해 유홍가로 빠진 중학 동창의 권유로 매춘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김양은 『학교 친구·후배들 7명과 함께 일한다』면서 20여명의 단골고객 이름과 호출기번호가 빼곡이 적힌 수첩을 아무렇지 않게 펼쳐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 전철역 인근 K편의점 앞에 3명의 여성이나타났다. 어색한 화장으로 「위장」 했지만 옛된 외모를 감추지 못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주위를 살피며 편의점 주변을 서성거렸다. 잠시후 승용차 두대가 다가왔다. 차안에 탄 회사원 풍 30대 남성들과 몇마디 주고받고선 이들은 차에 뒀다. 차는 코앞의 여관촌으로 사라졌다. 추적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서울시내 여고 3년 재학생이었고 무선호출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정모(18)·김모(17)·유모(18)양. 『지난해 초여름께 친구가 「한건 하자」기에 시작했는데 그뒤로 계속하고 있어요. 뭐 어때요. 돈도 벌고 재밌잖아요.』 리더격인 정양은 지난해 6월 고교에 진학하지 못해 유홍가로 빠진 중학 동창의 권유로 매춘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김양은 『학교 친구·후배들 7명과 함께 일한다』면서 20여명의 단골고객 이름과 호출기번호가 빼곡이 적힌 수첩을 아무렇지 않게 펼쳐보였다.

결석·가출 등 눈에 띄는 행동이나 외박은 일절 안한다고 했다. 고객 상대도 한달에 3~4번 정도. 정양은 부친이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둘째딸이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암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죄의식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유홍업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일명 「뒷구정동」거리에서 「보도사무실 (불법 직업소개소)」을 운영하는 김모(32)씨는 『유홍 업소에 제발로 찾아오는 여자중 3분의 1정도가 10대며 대부분 가출소녀나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이지만 간혹 재학생도 끼여있다』고 귀띔한다. 물질만능주의·향락풍조·불건전한 사회환경과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10대들은 변질된 성문화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90년대 10대의 성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성을 상품화했던 60, 70년대는 물론 인신매매 같은 80년대의 범죄적 차원이나 제한된 성적 탈선 등과도 다르다. 요즘 10대들 사이엔 「감추는 성」에서 「드러내는 성」으로, 「억압받는 성」에서 「즐기는 성」으로 성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10대들에게 성적 관심을 충족하는 밀실이기도 하다. 세계 전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란물 들추기」는 사실상 어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서울 H중 3년 정모 (15) 군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낯뜨거운 외국 누드모델 사진들이다. 농경사회·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어른들의 감각으로는 짐작이 어려울 만큼 요즘 아이들은 성에 일찍 눈뜨고 거리낌이 없고 아는 것이 많으면서 위태로울 만큼 무지하기도 하다. 『쉬는 시간만 되면 반까지 찾아와 「진지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옆반 아이들이 갈수록 늘지만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난감해요.』 서울 D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은 이명순 (26·여) 교사가 토로 한 고충이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D비디오방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하다 적발된 박모(17·고2) 군. 박군은 경찰에서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느냐』고 항의, 오히려 수사관들을 놀라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남녀 중·고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조사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정경균 (61)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불과 40%만이 순결을 지키겠다고 답변했어요. 90년대 청소년들의 성의식은 한마디로 개방화 차원을 벗어나 성을 단순한 소모품 또는 기호품정도로 여기는 성의 「몰 가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광혜병원 신승철 (신경정신과) 원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성문제를 다루는 것을 여전히 금기시 하는게 가장 큰 문제다. 가정·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일본 청소년들의 성일탈은 이제 손을 쓰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바로 지금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나서 청소년들에게 전전한 성의식을 싫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본 청소년 성문제 전문가인 도쿄가쿠게이 (동경학예) 대 교육심리과 후쿠토미 마모루 (복부수) 교수는 이렇게 총고하고 있다.

◎여론조사／3명중 1명 “혼전순결 지킬 필요없다”／만13세 전후 남녀 교제 활발… 조숙화 반영

신10대에게 성은 완전히 「금지된 장난」이 아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 3명중 1명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33.0%) , 결혼과 연애는 별개라고 생각하며 (50.3%)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8.8%). 만19세 남성은 74.2%가 데이트를 할 때 이성과 손을 잡아봤으며 45.2%는 키스를, 22.6%는 성경험을 해봤다고 고백한다. 만19세 여성은 60.0%가 손을, 36.7%가 키스를, 10.0%가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해 또래의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낮은 편이다. 남성의 경우 중학생 (만13~15세) 도 2.6%가, 고교생 (만16~18세) 은 4.5%가 성경험을 실토했을 정도다. 직접적인 신체접촉까지는 아니더라도 신10대는 다양한 이성교제 통로와 성문화에 노출돼 있다. 10대 전체의 비율로 볼때 폰팅 (30.8%) · 미팅 (32.2%) · 소개팅 (30.0%) 을 통해 3명중 1명 정도가 이성을 만나본 적이 있다. 이러한 이성교제방식이 중학생 집단에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 (각각 27.0%, 20.3%, 15.5%) 해 만13세를 전후해 이성교제가 활발해지기 시작함을 알수 있다. 만19세에선 보편화된 방식이다 (각각 50.8 %, 70.5%, 72.1%).

◎고교생 4.5% 성경험

신10대의 성의식 개방화에는 어른들이 제공하는 유해 환경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8.6%는 불법 포르노 비디오를 빌려 봤으며 8.3%는 의사가 설치된 비디오방(40%)이 아닌 침대 비디오방에 갔었다고 한다. 특히 34.8%가 「또래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거나 가했다」는 얘기를 직·간접으로 들어봤다고 털어놨고 38.4%는 「임신을 했거나 시켰다」는 얘기를, 22.6%는 「낙태를 했거나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신10대를 둘러싼 주변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수치다.

◎기고／자기조절 능력 키우게 바른 정보 제공해야／이명화 YMCA청소년상담실장 지난해 베이징 (북경)에서 열린 제4회 유엔세계여성대회 실무위원회에선 10대들의 성생활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들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성관련 장애요인을 철폐하자』고 주장한 반면 교황청 및 이슬람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성적 방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교육 확대 실시에 반대했다. 나흘간의 논쟁끝에 양측은 주장을 절충, 청소년들이 성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교육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행동강령(보건분과)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문화나 현상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내면세계와 발달과 경을 살펴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문화는 크게 극단적인 두가지 양상으로 표출된다. 의식적 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에 대해 침묵하고 억압하거나 반대로 「배설적」인 성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솟아오르는 호기심과 충동을 억누르며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며 생활한다. 반대로 후자는 정서적인 불안감·외로움·불만족을 성행위로 달래려고 시도, 「성적 상품」으로 추락하거나 타락한 성생활을 흉내내기도 한다. 동료들 간의 매매충이나 동성간 성행위 등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입시위주의 교육과 퇴폐·향락적인 기성세대의 성문화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단순히 성욕구 억압·성문제 예방 등의 소극적인 차원에서 탈피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성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이성과의 교제를 유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심리적 유대감을 총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충동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 '성문제'가 가장 큰 고민

발행일 : 92/07/11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성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행에 관한 상담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회장 김재철)가 지난 일년간 청소

년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사례 1천7백29건(전화상담 1천4백48건,면접상담 2백81건)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의 29.4%(5백9명)가 성에 대한 문의, 성폭행을 당한 뒤의 후유증 해결방법이나 범람하는 성충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대처방법 등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비행문제'로 19.4%(3백35명),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이 14.4%(2백49명)를 각각 차지했다. 전화상담 1천4백48건중 성문제에 대한 문의를 해온 청소년이 4백97명(34.3%), 비행에 관한 것이 2백89명(20%)을 각각 차지한 반면 면접상담 중에서는 학교나 진로선택 등에 관한 '진로문제'가 1백20명으로 42.7%, 성문제는 불과 12명(4.3%)밖에 안돼 청소년들이 성문제에 관한 한 아직도 타인과 이야기하기를 꺼려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화상담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면접상담 가운데 비행에 관한 것은 89년 11%, 90년 15%를 차지했으나 91년에는 18%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성격상의 문제점에 관한 상담도 19%를 차지, 89년의 13%, 90년의 16%에 비해 각각 6%와 3% 증가됐다.

또 상담실을 찾은 청소년들은 학생이 대부분으로 77.2%를 차지했는데 고교생이 50.5%(1백42명)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12.1%(34명), 국민학생이 1.7%(5명)를 차지했다. 이규미 청소년상담 실장은 "일단 상담실을 찾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 수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도움을 주고 있다"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 해결한다 차원에서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중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들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단순한 충동보다 부탄가스나 본드 등을 흡입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지도와 관련법규의 엄격한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 음주·흡연

담배자판기 철거의 교육환경 개선 (사설)

서울신문 93.06.27

학교주변의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전국의 모든 담배소매점과 자판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도록 하는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 교육부는 25일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서의 담배자판기와 무도장·무도학원 설치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재무부가 26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하는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만들어 이를 오는 8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과 자판기에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소년흡연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조

치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성실한 시행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부끄럽게도 세계 1위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회의 표본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이 44.8%로 일본(26.2%) 미국(15%) 보다 2~3배 더 높다. 남학생 두명중 하나, 여학생 일곱명중 하나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심지어 남자중학생 1백 명중 3~4명이 상습흡연자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담배자판기가 청소년흡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흡연청소년의 90% 이상이 담배자판기에서 담배를 구입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쉽게 담배를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매행위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한 담배를 선전하는 입간판으로서의 상품선전을 극대화한다는 문제점도 담배자판기는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 주변 2백m 이내 학교환경 위생경화구역 안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금지는 청소년유해환경의 적극적인 제거라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 길목마다 자판기가 널려 있는터에 제한된 구역안에서 만의 설치금지가 효력을 지닐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겠지만 학교주변에서부터 차근차근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사실 담배만이 아니다. 학교앞 서점과 문방구에서는 성인용 누드사진집을 벼젓이 팔고 있고 음란만화와 비디오도 널려 있으며 독서실 지하에 전자오락실이 있어 청소년의 발길을 끌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퇴폐행위에 유혹될 가능성을 부채질하는 노래방이 주택가까지 침투해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는 6천 2백여곳에 이른다. 담배를 비롯한 이같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강력한 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마련과 함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있어야겠다.

고교생에 술 판매한 주인 서울지검 구속영장 기각 스포츠조선 1991. 4. 1.

서울지검 이명재검사는 30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고교 3년생 4명에게 술을 판 강남구 삼성동 119 '레이저호프' 생맥주집 주인 나길수씨(38)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검사는 "입장한 미성년자들이 17, 18세의 나이로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쉽게 구별되지 않고 퇴폐영업이나 기타 법규위반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학교주변 담배자판기 철거 조선일보 1992. 7. 8.

한국담배인삼공사는 7일 학교주변 정화를 위해 한국담배협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주변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와 광고물들을 오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학교경계선 2백m이내(학교환경정화구)에 설치된 담배자판기 8백여개와 광고물이 모두 철거된다.

청소년 흡연률 세계최고..금연운동협의회 조사

92.05.27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생의 흡연률은 44.8%로 일본의 26.2%, 미국의 15.0%보다 훨씬 높아 사실상 세계에서 최고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가 27일 발표한 전국의 남자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년별 흡연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육체적, 정서적으로 흡연에 의해 짜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 3년생중 44.8%가 흡연그룹에 속하는 것외에도 20.2%는 과거에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으며 비흡연 학생은 35.0%에 그쳤다.

또 고교 1,2년생중에서도 현재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각각 14.3%와 38.2%로 나타났으며 흡연경력을 가진 학생까지 합치면 40~60%가량이 담배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의 흡연동기는 '호기심'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26.1%), '멋있게 보이기 위해'(24%), '스트레스 해소'(6%)순이었다.

흡연행위에 대해 중학생의 77.4%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해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깍연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반응과 '흡연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각각 45.5%로 똑같이 나와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담배의 해독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협의회측은 청소년의 금연과 관련,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이된 후 흡연을 시작하는 것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게 빠질 뿐 아니라 이들의 흡연은 다음 단계인 청소년범죄 및 비행과 연결 된다"고 밝히고 "가정과 학교등에서의 금연지도는 물론 청소년에 대한 담배 광고와 판촉의 금지, 담배회사의 각종 스포츠행사에 대한 제정지원을 금지하고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연법 전문가 찬반의견..찬성

95.12.18

담배 속의 니코틴은 국제질병분류체계상 중독성 약물로 분류돼 있고 미국 식품·의약품 관리청(FDA)도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국민적 합의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금연을 위한 여러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중이 모이는 모든 건물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유럽연합(EU)은 10대의

청소년이 담배를 계속 피울 경우 그들중 50%는 흡연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고 있다면서 각 회원국들에 금연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전체사망자의 70%이상이 암이나 뇌혈관질환등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첫째 원인이 흡연이다.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73.2%(세계1위)에 이르고 있고, 고등학교3학년 남학생조차 흡연율이 40%를 넘었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저개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흡연율이 늘어나다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도 50~60년대에 높은

흡연율을 보이다가 지금은 20~30%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꾸준한 금연 정책의 추진으로 매년 1~2%씩 감소되고 있어 향후 15년이내에 성인남자 흡연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이나 코카인등 마약보다 강하므로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함께 지정하도록 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고 담배자판기는 미성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만 설치토록 하며 담배의 광고·판촉 제한도 더욱 강화했다.

금연을 범국민적인 건강생활실천운동으로 추진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해외토Pic> 노르웨이, 담배자판기 금지

95.2.4

노르웨이는 2일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를 전면금지하는 새로운 흡연규제 법을 통과시켰다고. 새 법은 이밖에도 공공장소쪽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의 흡연도 금지하고 담배를 사거나 팔 수 있는 법적 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

현재 노르웨이 성인들중 흡연자는 35%에 달하는데 이는 스웨덴(23%), 페란드(24%)등 다른 이웃 스칸디나비아국들보다 훨씬 높은 것.

폴란드, 라디오·TV 담배광고 금지

95.1.5.

(바르샤바 로이터=연합) 폴란드는 금년 1월1일부터 라디오, TV 및 청소년용 출판물을 통한 담배광고를 금지했다고 방송관계자들이 2일 밝혔다.

담배광고 금지는 지난 93년 제정된 불공경쟁방지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효력

발생에 들어갔다고 국영 라디오, TV 감시기구의 보고서로 펴보바르 광고부장이 밝혔다. 폴란드 국영TV는 이미 담배와 술 광고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으나 일부 민간방송은 담배 광고를 계속 내보내왔다. 펴보바르 부장은 담배광고 금지가 방송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담배광고 종단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는 방송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또 성인용 출판물이나 포스터 광고물에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보다 생생한 경고문을 넣도록 할 예정이다.